

2024

3

Monthly  
Magazine

통권 244호

2024 - 3

세무회계경영

저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안건  
세조  
회조  
계세  
법정  
인보

#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세무회계경영저널

### eAnSe.com

30분내 Q&A답글 +  
 ☎ 02-829-7575  
 ☎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2024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국세청)

[주요정보]

-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국세청)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돌려드립니다(국세청)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등록번호 영등포로-0129 · 등록일 2003  
 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  
 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 안세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0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4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2년 매출액 650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 · 금융자문 · 인수합병 M&A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중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정 훈 ·유환철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경호 · 고두환 · 공희성 · 권창현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배익권 · 송형곤 · 설찬수 · 양승민 · 오승혁 · 유진우 · 유지운 · 윤형민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샤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정훈 · 제갈원구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진수미 · 최영진 · 최진강 · 표정협 · 한상표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광영미 · 이현섭 · 배문호 · 최민욱 · 황준호 · 정호신 · 박지은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용희 · 김현단 · 선지우		
가산디지털본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현 · 설찬수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김수영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운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허정식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영민 · 이원재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허 근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조승범 · 이승환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중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 1.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 2.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 3.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 4.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 5.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 6.외감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 7.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 8.사업계획서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 9.M&A실사조사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 10.화의·법정관리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 11.외국 · 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 12.기타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 · 훈련강의저널  
+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 3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1(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종교인기타) 제출
20(수)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 2
- 상속공제 · 증여공제 여부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 ..... 3
- 외부회계감사 대상에게 실행 가능 · 불가능한 업무 비교 ..... 4
-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더 많이 환급받는 요령과 계산이유 ..... 5

## 이 달의 세무신고 Checkpoint

-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국세청) ..... 6

## 이달의 특집

- 2024년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국세청) ..... 35

## 회계정보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 136

## 세무정보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국세청) ..... 139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2월) ..... 144

#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 안세재경저널 2024/2/7일자 통권 1661호

개념구분	근로소득자(종속고용)	사업소득자(독립활동)
업무방법	임금목적 근로 제공(한 직장 종속성)	일의 완성계약(검직 등 독립성)
근거법률	근로기준법(1년 당 30일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없음(민법 제664조의 도급, 위임계약)
세법규정	퇴직소득(소득세법 제22조)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부가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퇴직금	퇴직급여(퇴직급여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연금, 일시금)	규정 없음(개별계약으로 가능)
지급의무, 수급권리	동일직장 1년 이상 근무시	별도 근거없음(자유직업활동자와 지급자와의 개별계약에 의함)
실제분쟁문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등으로 보장되며 쌍방불일치나 제소 없음	동일직장 1년 이상 활동시, 퇴직금 청구하는 경우 있음
지급시의 소득분류	퇴직소득	퇴직일시금도 사업소득임
계산방법	임원 : 2011년까지는 규정대로 +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3배수 + 2020년부터는 2배수 일반직원 : 근로기준법 기준 등 1배수로	총지급액 3.3% 원천징수 된 후 수입수익자가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함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1.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연당 300만원 등 2. 환산급여공제 : 3억원 초과시 35%	총수입금액 - 실제소요비용 = 퇴직시의 사업소득

## ◎ 상속공제·증여공제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 안세재경저널 2024/2/14일자 통권 1662호

개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범위	국내에 주소,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국내 주소 둔 날, 국외근무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100% 현지법인 파견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자 아닌자(183일 미만 거소), 국외이전출국 다음날</li> <li>외국인</li> </ul>
수증재산증여세	국내외 모든 재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증여과세합산범위	특정증여일 소급 10년 합산	좌동(소급 10년 합산)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 공제 적용	적용 안 함
직계존비속공제	5천만원 공제적용(미성년자 2천만원)	적용 안 함
기타 친족공제	1천만원 적용	적용 안 함
결혼·출산증여공제	자녀당 합 1억원 적용	적용 안 함
생활비·교육비 등	학자금 등 비과세 적용	좌동(비과세 적용)
혼수용품	통상 필요금액 비과세	좌동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 적용(일괄 5억)	기초공제 2억 적용(3억 자녀공제는 적용 안함)
배우자 상속공제	5억≤실제상속≤30억 적용	적용 안 함

## ◎ 외부회계감사 대상에게 실행 가능·불가능한 업무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4/2/21일자 통권 16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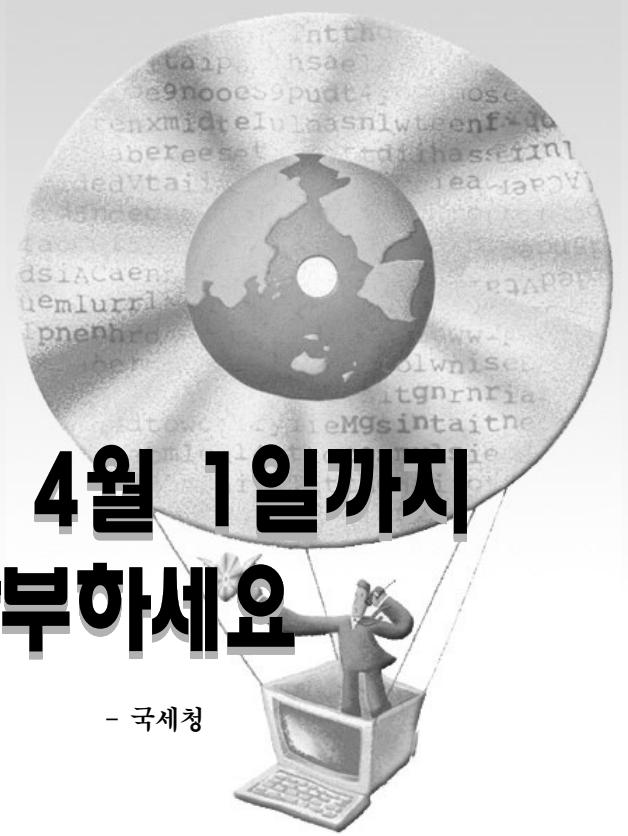
개념범위	불가능 업무범위	가능업무범위와 조건
회계기록, 재무제표 작성	독립성 침해, 불가능	분개, 자문도 안됨
내부감사역할대행	독립성 침해, 불가능	내부감사 취임도 안됨
재무정보체계 구축	독립성 침해, 불가능	S/W 및 H/W 컨설팅 모두 안됨
매도, 매수자문	독립성 침해, 불가능	매도·매수 아닌, 증자·감자 등의 자문은 가능
기업가치평가	독립성 침해, 불가능	매도·매수 아닌, 증자·유상감자용 평가는 가능
인사조직자문	독립성 침해, 불가능	경영과 회계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어 안 됨
자금조달 알선중개	독립성 침해, 불가능	재무제표에 본질적 영향 있어 안 됨
민사·형사 소송자문	독립성 침해, 불가능	재무계정과목과 재무제표시 본질 영향을 끼쳐 안 됨
세무조정·세무대리	독립성 침해 열거안됨(실행 가능)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함(윤리기준 : 독립성 위협없음) 가능(내부감사 동의)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90.178)
조세불복· 세무조사 등	독립성 침해 열거안됨(실행가능)	가능(이해상충 소지 없음)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90.180)

## ◎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더 많이 환급받는 요령과 계산이유

- 안세재경저널 2024/2/28일자 통권 1664호

개념, 구분	범위, 계산방법, 이유, 유리·불리쟁점
소득구분	종속적 근로소득 직장인(4대보험 가입자임, 알바생, 일용소득자는 제외됨) ↔ 독립자유직업은 사업소득임
정산 이유	평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표준적 상황으로 과세 →1년동안 소득자 상황 변경(±)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실제금액이 연말에 확정·차감되므로 대부분 환급 발생(13월급)
비과세소득 등	총 연봉 - 비과세 등(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수당 20만원, 해외근무 100만원 등) ⇒총급여액
소득공제 (필수공통사용)	구간별 소득공제,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만원 등) : 누진한계세율 따라 올라가 최고세율에서 적용되므로 고소득층일수록 세금감소 유리)
특별소득공제	본인 건보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 25% 초과액의 15%~40% 등)
부동산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40% 등 자금(저축원금 + 상환원리금), 장기주택차입금 이자공제
세액공제 (실지출아님)	자녀세액공제(1명 15, 2인 연 30, 3인 이상 초과부터 연 30만원), 출산공제(첫째 30, 둘째 50만원) : 건당 15% 내외의 일정액이므로 고소득층에 불리함(낮은 세율로 공제액 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낮은 한계세율 적용)
특별세액공제 (선택적)	손해보험료 12%, 의료비(본인분 전액, 3% 초과분의 15%, 미숙아 등 20%), 월세액(15% 등), 교육비 15%, 기부금 등 10%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국세청

- (개요)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 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입니다.

○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Ⅰ 세정지원 내용 요약 Ⅰ

구 분	납부세액 발생	환급세액 발생
세정지원 내용	납부기한 직권 연장 (4. 1. → 7. 1.)	환급금 신속 지급 (30일 내 → 10일 내)





- 한편,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우편·방문 신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기업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 이러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가 도움자료를 보다 알기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이번 신고부터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에 대한 사적사용 혐의를 분석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개별안내 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동업기업은 2,000여 개로 그 숫자가 적어서 그동안은 전자신고를 하지 못하고 우편·방문 신고만 해 왔으나, 금년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10.9만여 개로 지난해 106.5만여 개보다 4.4만여 개 증가하였음
-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화)까지 신



고·납부할 수 있음

-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금)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간편신고서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제출

□ (납부)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분할납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할 세액 1천 만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li> <li>▪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li> </ul>
분할납부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5. 2.까지)</li> <li>▪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이번 신고는 6. 3.까지)</li> </ul>

## 참고 2 -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 (건설·제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건설·제조 중소기업 선정(5.2만 개)
- (수출)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선정(1.1만 개)
-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선정(0.2만 개)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Ⅰ 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 Ⅰ

구 분	선정기준
건설 · 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 '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 세정지원 내용

- (납부기한 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12. 31.까지 한시 면제)
- (환급금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내(4. 11.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 참고 3 - 신고 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 신고도움서비스

- (개요) 기업이 세제혜택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텍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 I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자료 I

유 형	제 공 자 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 주요 개선사항

- (도움자료 확대 제공)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 \* 신고도움자료 :('23년) 392개 유형 → ('24년) 414개 유형(+22개 유형)
- (오류검증 서비스 확대)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오류 검증서비스를 확대\* 적용
  - \* ('23년) 38개 항목 → ('24년)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오류 등 43개 항목으로 확대
- (구체적 자료 제공) 개별분석 안내자료의 내용을 추상적인 문구가 아닌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구체적 자료 제공
  - \* 64개 안내항목 중 41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 자료 제공
- (취약분야 안내) 법인 소유 주택·요트·고가의 헬스회원권 등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 취약분야 개별분석자료 주요내용

- (주택) 사주 일가 등의 법인 소유·임차 주택 사적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 (요트·고가 헬스회원권) 업무 관련성이 낮은 레저용 선박, 사적사용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헬스회원권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 (합병·분할) 합병·분할 법인에 대하여 납세자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합병·분할 과세제도'의 주요 세무처리와 관련된 유의사항 사전 안내

### □ 모바일 안내

- (신고도움자료) 중소기업이 신고도움서비스의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사항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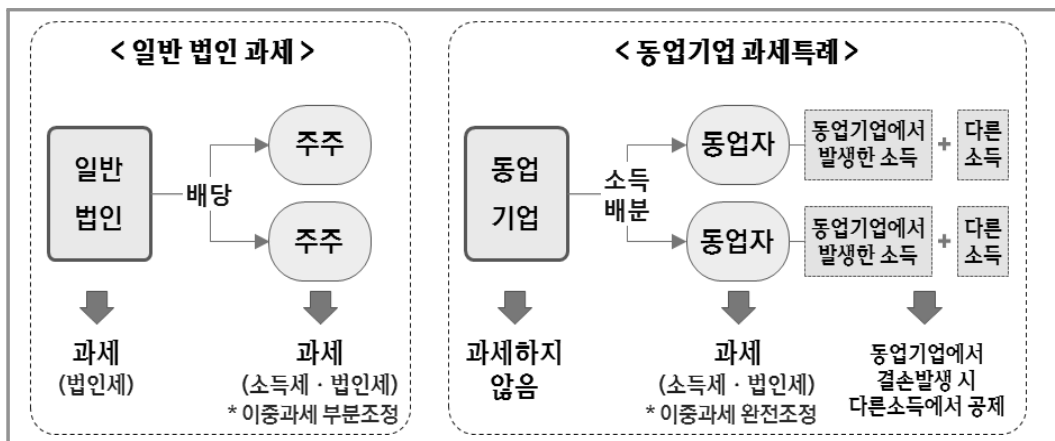
- (공제·감면) '23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세제혜택\*을 안내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참고 4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전자신고

### □ 동업기업 과세특례

- (개요)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관으로 보는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적용대상) 인적회사 성격의 조합, 합자·익명조합, 합명·합자회사(자본시장법 적용 일부 제외), 전문인적용역 제공 일부 법인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 신고방법 개선

- (종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부속 서류 포함 14개 서식)를 수동으로 신고
- (개선) '24. 3월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의 전자신고를 통해 수동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신고 오류 해소





## 참고 5 - 사전안내와 연계한 정밀한 신고내용확인 실시

- ☐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실시
  - (신고 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
    - \*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 Ⅰ 주요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정사례 Ⅰ

- ① 고가의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 ②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 ③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 ④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 ⑤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⑥ 사주일가가 무상사용한 법인의 임차주택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 ⑦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부당 적용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⑧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한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부당 적용
- ⑨ 감면사업 내 결손금 미통산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밖으로 이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부당 적용

-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참고 6 -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정 사례

### ㉠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

####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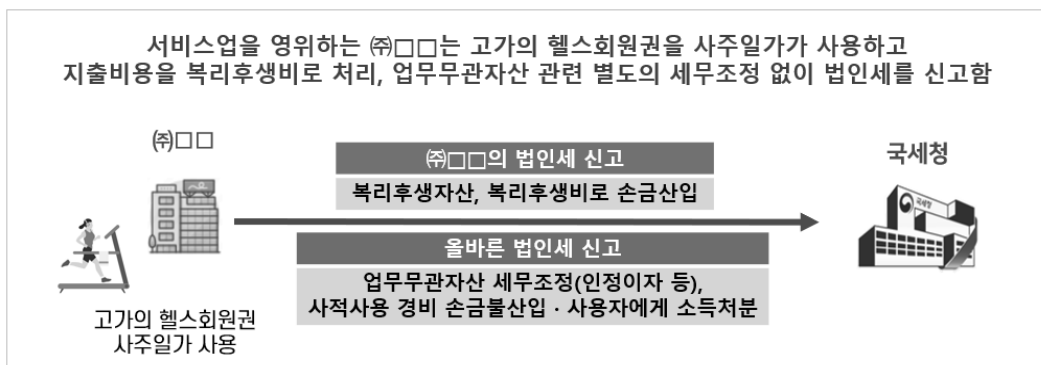
-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 신고내용

- (주)□□은 고가의 ○○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고,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

#### □ 검증결과

- (주)□□이 취득한 ○○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여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정
- \* 회원권 보증금에 대한 가지금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주일가가 사용한 고가의 헬스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으로 세무조정하고

✓ 지출한 경비는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정



## ㉔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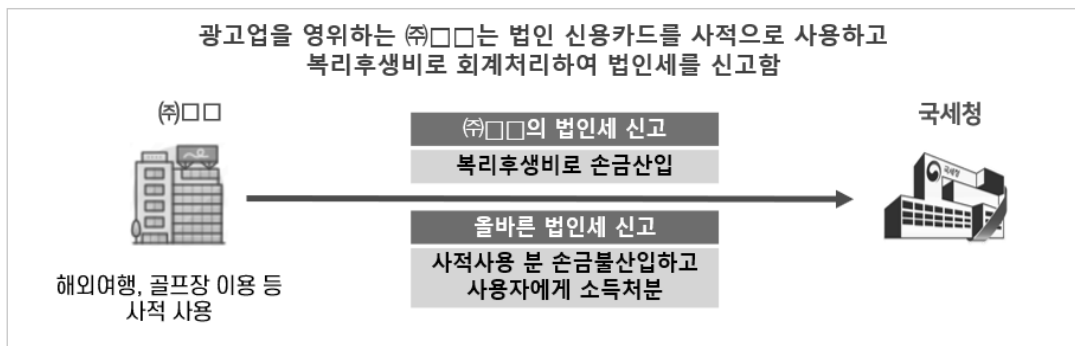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 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 신고내용

-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

### □ 검증결과

- (주)□□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〇억 원 추징



✓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㉔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 사전 신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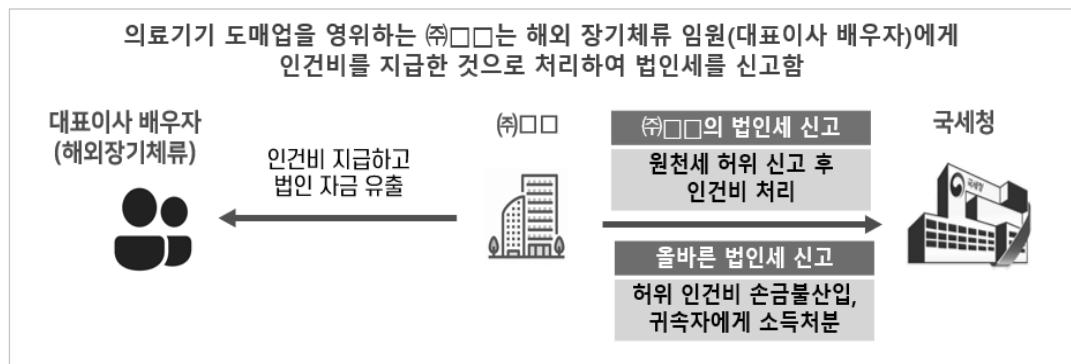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 신고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 검증결과

-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〇억 원 추정



해외현지법인, 해외거래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

✓ 가공으로 계상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정



## ㉔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 □ 사전 신고안내

- 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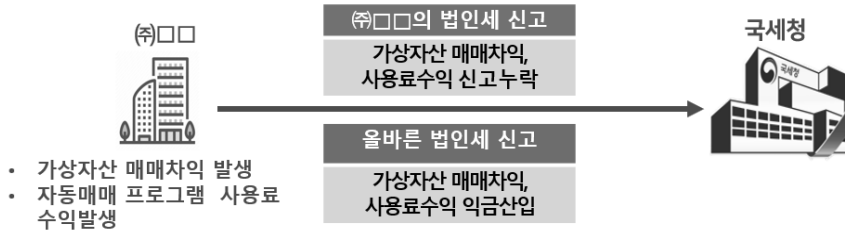
### □ 신고내용

- (주)□□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가상자산매매차익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누락

### □ 검증결과

- (주)□□의 가상자산 매매내역,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여 관련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주) □□은 가상자산 매매차익과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수취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누락함



✓ 가상자산 매매차익,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신고누락 분 추징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 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 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 누락

###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주택 및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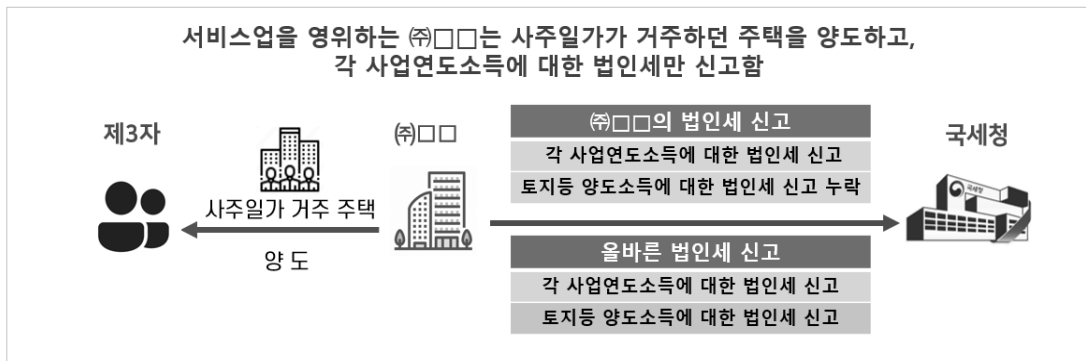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 ☐ 신고내용

- (주)□□는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

### ☐ 검증결과

- 재산세 과세내역 · 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징



**재산세 과세내역, 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의 양도분에 대해 법인세 0억 원 추징



## 참고 7 -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

### 가. 특수관계자 거래

❖ 서면-2023-법규법인-0476, 2023.8.28.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 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022. 2. 10.

증여인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수증인들을 개재시킨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출자금을 회수한 금전으로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거래를 가장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022. 10. 27.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특허권은 그 내용상 원고 내 설비 및 자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직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만으로 완성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본 원고 내 기술인력 및 설비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대표자 개인이 단독으로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차입일부터 이차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 10. 20.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2021. 11. 30.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2021. 11.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14, 2021. 11. 4.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 10. 15.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6두54213, 2019. 5. 30.

원고회사와 원고회사의 임원들인 이 사건 이사들과 함께 AA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일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주식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련없는 이 사건 이사들 양도부분은 원고회사가 받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 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 나. 업무용승용차

❖ 서면-2022-법인-4057, 2023. 6. 1.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 9. 29.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 10. 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 6. 12.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 9. 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 6. 28.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다. 사적 경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서면-2018-법인-3221, 2019. 8. 1.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마. 손 금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 2023. 10. 12.

(쟁점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쟁점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절한 경우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2-법인-5631, 2023. 8.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 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에서 ‘회수기일’ 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2-법인-5580, 2023. 8. 3.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 10. 26.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 10. 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 12. 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 12. 30.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2021. 12. 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 12.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 10. 27.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 5. 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 3. 4.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 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 9. 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 바. 부동산 양도차익

❖ 서면-2022-법규법인-5229, 2023. 7. 27.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 서면-2022-법규법인-3396, 2023. 10. 1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 10. 27.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2021. 10. 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 사. 합병·분할

❖ 서면-2023-법인-0778, 2023. 9. 26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내국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 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임

❖ 사전-2023-법규법인-0518, 2023. 12. 07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 2. 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 12. 28.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靈&F」 제1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 2021. 11. 29.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 2021. 10. 27.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 8. 24.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672, 2021. 6. 2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2020. 11. 16.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



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2020. 3.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

## 아. 공동경비 및 가산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5, 2021. 3. 1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동차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자동차금융 관련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플랫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다만, 통합플랫폼 관련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나목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통합플랫폼을 통해 실행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인-4570, 2020. 3. 1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경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80, 2020. 1. 9.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91, 2021. 10. 27.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9, 2021. 7. 16.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5, 2020. 2.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제2호가목(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중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1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서면-2022-법인-2191, 2022. 08. 16.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자산양도차익에서 공제되므로, 과세형평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85, 2022. 08. 16.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2021. 3. 23.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차.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 3. 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



우를 포함) 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2023. 09. 06.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 09. 2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대해 동법동조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동법동조제5항에 따라 동법동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고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동법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9조의7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법동조제2항 후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 08. 28.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 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2023. 07. 04.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 서면-2022-법인-4398, 2022. 11. 17.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2-법인-2973, 2022. 11.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 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2-법인-1041, 2022. 12. 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됨

❖ 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 1. 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 서면-2022-법인-1043, 2022. 3. 16.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 5 .2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 8. 18.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 6.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의 개정 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 3. 30.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0-법인-5698, 2021. 3. 15.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 1. 7.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 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 9. 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018-법인-3405, 2020. 9. 28.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 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 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 9.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 8. 3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법인-2005, 2020. 2. 27.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 12. 24.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9-법인-1741, 2019. 9.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 5. 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심 2018-서-1956, 2018. 6. 29.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님

#### 카. 외국납부세액공제

❖ 서면-2021-국제세원-7318, 2022. 6. 27.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2. 23.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29, 2018. 9. 6.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 10. 25.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 납부하세요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1, 2014. 10. 14.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단. 미환류소득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 10. 05.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23법규과-2496, 2023. 11. 17.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 09. 05.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 06. 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용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가능

(2안) 매 사업연도마다 이월결손금 차감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 8. 2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 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 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 8. 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4, 2021. 8. 19.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이달의

특집

# 2024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 국세청 -

## I. 제도 개요

### 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 개요

-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⑰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4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혜택) 심사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②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위 혜택 제외

## ● 사전심사 신청방법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 (신청구분) 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 활동 및 비용검토, 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연구개발 활동 및 비용검토, ③ 인력개발 비용의 적정 여부 검토
  -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는 조특령 [별표7] 또는 [별표7의2] 기술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 여부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세액공제 시스템(<http://taxcredit.kiat.or.kr>)에서 신청 가능함
  -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구 분	정 의	검 토 기 관	
		연구개발활동 및 비용 적정 여부	기술 해당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국세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국세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연구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국세청	-
	(인력개발비) 내국인이 고용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비		

- (신청범위)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인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연구과제 중 특정 연구과제만 선별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용 확정 전이더라도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만 신청할 수 있음
  - ※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이거나,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면 심사제외 될 수 있음

**신청범위 개선**

-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22년 7월부터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수행한 활동이 세액공제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사전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23년 상반기(1~6월)에 진행하였던 연구과제 전부 또는 특정 연구과제가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하반기(7월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

-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함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본점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등)
  - \*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민원사무구분 '신청' 선택 후 신청
  - \*\* 재심사 신청은 같은 조회 화면에서 민원사무구분을 '재심사 신청'으로 선택 후 신청
- (신청서류) 사전심사 필수서류인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법상의 연구개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와 지출한 비용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연구개발활동 증빙자료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수행한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며 형식적 제한은 없음

항 목		입증 서류 예시
연구개발활동 증빙		연구증빙자료(내부보고서, 회의록, 연구노트* 등)
공통증빙	인 적 구 성	① 연구원 등록현황(KOITA)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인 건 비	급여대장
비용증빙	재 료 비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품목, 수량, 금액, 거래처 등)
	위탁개발비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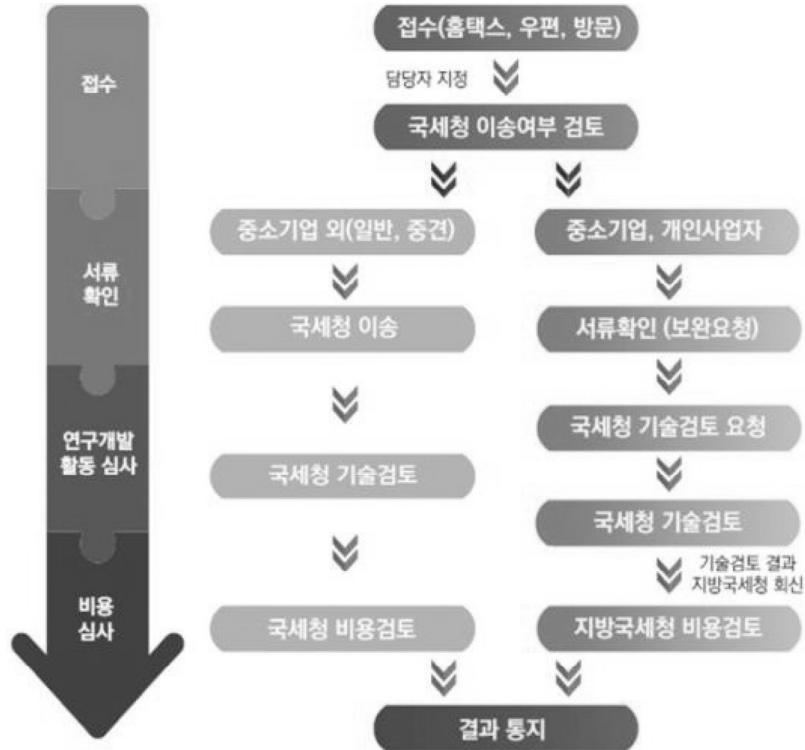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운영하는 연구노트포털(<http://www.e-note.or.kr>)에서 연구노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보안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는 사전심사 업무 등 성실신고 지원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사전심사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신청인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의 원본을 반환 요청하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



## ● 사전심사 진행 절차

### ○ 심사 프로세스



- (심사이원화) 사전심사 이용 증가 기대 및 신속·정확하게 검토하여 결과 통지하기 위해, 2021.1.1.부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사전심사 진행하고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 및 중견기업은 국세청(본청)에서 사전심사 진행
- (2단계 심사) 연구개발활동 검토와 비용검토로 구분하여 심사 진행

구분	1단계 (연구개발활동 검토)	2단계 (비용검토)
검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조세특례제한법 제2조)</li> <li>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li> <li>연구전담(보조)요원 연구개발활동 전담 여부(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인력개발비 범위 해당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li> <li>-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li> <li>- 인력개발비</li> </ul> </li> </ul>
검토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국세청 사전심사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개인사업자</li> </ul> </li> <li>국세청(본청) 사전심사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외(일반, 중견기업)</li> <li>- 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기술검토요청</li> </ul> </li> </ul> <p>*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국세청 사전심사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개인사업자</li> </ul> </li> <li>국세청(본청) 사전심사 전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외(일반, 중견기업)</li> </ul> </li> </ul>

입증서류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보고서</li> <li>내부보고서, 회의록, 연구노트 등</li> <li>연구개발 인력현황</li> <li>조직도 및 업무분장표</li> <li>기타(연구개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 인력현황</li> <li>조직도 및 업무분장표</li> <li>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서(품목, 수량, 거래처 등)</li> <li>위탁연구과제 집행내역서</li> <li>위·수탁계약서 및 관련 증빙 내역(연구 결과 보고서 등)</li> </ul>
--------	---	---

- \* 지방국세청 사전심사담당자는 1단계(연구개발활동 검토) 과정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세청(본청)에 기술검토 요청함. 국세청(본청)은 기술검토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자문위원을 통해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심사방법)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서면심사로 진행함
-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현장확인\* 요청을 진행할 수 있음
- \* 심사절차에서 현장확인이 필수는 아니나, 신청인의 사정으로 현장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현장확인을 진행
- (보완자료 제출 방법) 연구개발활동 및 비용 등을 입증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추가서류는 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인의 사정으로 홈택스 제출이 불가할 경우, 사전심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메일,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선택 ⇒ 인터넷접수목록 및 추가서류 제출 ⇒ 추가서류 등록/열람 ⇒ ‘첨부하기’ 선택

## ● 사전심사 담당 기관 및 부서

담당업무	사전심사 기관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일반·중견기업 사전심사, 재심사	국세청(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044)204-3923-33
중소기업 사전심사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02)2114-3033-39
	충북지방국세청 법인세과	(16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031)888-4963-9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032)718-6494-6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	(042)615-249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062)236-7483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053)661-7484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	(051)750-7463-5

## 0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 ● 세액공제 개요

- (개요)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 (도입취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
-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 연구·인력개발 정의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2호)

### ● 세액공제 요건

- (형식적 요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요건에 규정된 비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외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실질적 요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할 것

**연구·인력개발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제12호)**

-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조특령 제1조의2 활동을 제외함
-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계산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금액 = ① + ②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기업규모·업종·기술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을 곱한 금액
  -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발생액×공제율
  -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당기발생액×공제율
  -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④와 ⑤ 중 선택
    - ④ 증가분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 - 직전기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공제율
    - ⑤ 당기분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당기발생액×공제율

**세액 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율

구분	2014~2016	2017	2018~2023
중소기업	30%		$3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10\%\right)$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20%	$2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10\%\right)$	$25\%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15\%\right)$
그 외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			$2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10\%\right)$

※ 수입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 2014~2016년은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공제신청

- ① 중소기업 :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소비성서비스업 영위기업은 제외)

\* 제조업(8백억~1천5백억원), 건설·도소매업(1천억원), 서비스업( 6백억원)

- ②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

- ③ 일반기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율

구분	2021.7 ~ 2023
중소기업	$4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10\%\right)$
그 외 기업	$30\% +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3.10\%\right)$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 ① 당기분 방식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공제율

구분	2014 ~ 2017	2018 ~ 2023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유예	1~3년차 : 15%	4~5년차 : 10%
중견기업 8%	8%	
일반기업	'17 : $\text{Min}\left(1\%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3\%\right)$	$\text{Min}\left(\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2\%\right)$
	'15~'16 : $\text{Min}\left(2\%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3\%\right)$	
	'14 : $\text{Min}\left(3\%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수입금액}} \times 50\%, 4\%\right)$	

- ② 증가분 방식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 공제율

구분	2014 ~ 2016	2017 ~ 2018	2019 ~ 2023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40%	
일반기업		30%	25%

## ※ 증가분 방식의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증가분 방식은 적용하지 않고 당기분 방식만 적용함

- ① 당기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② 직전기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당기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 소급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 수}} \times \frac{\text{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위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

☞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의도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줄이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또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 ①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공통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6항)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은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
  -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공통비용은 전액 신성장·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
- ② 재료비가 공통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6항)
  - － (계산방법) 공통재료비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 공통재료비 안분계산 방법

$$\text{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text{공통재료비} \times \frac{A}{A+B+C}$$

$$\text{㉕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text{공통재료비} \times \frac{B}{A+B+C}$$

$$\text{㉖ 일반연구개발비} = \text{공통재료비} - \text{㉔} - \text{㉕}$$

※ A :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의 인건비

B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의 인건비

C : 일반연구개발의 인건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 사례(2023년 귀속)

**사례 ① (주)☆☆(중소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산업용로봇 제조업

<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500억	550억	600억	700억	800억
자산총액	800억	800억	900억	900억	950억
연구·인력개발비	1.5억	2.0억	2.0억	2.3억	2.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증가분 방식:  $(2.8\text{억} - 2.3\text{억}) \times 50\% = 2,500\text{만 원}$

- 당기분 방식:  $2.8\text{억} \times 25\% = 7,000\text{만 원}$

- 따라서 (주)☆☆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7,000만 원 공제

**사례 ② (주)★★(중견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합성수지선 제조업

<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1,600억	1,650억	1,700억	1,800억	1,900억
자산총액	2,100억	2,150억	2,300억	2,500억	2,700억
연구·인력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증가분 방식:  $(8\text{억} - 6\text{억}) \times 40\% = 8,000\text{만 원}$

- 당기분 방식:  $8\text{억} \times 8\% = 6,400\text{만 원}$

- 따라서 (주)★★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8,000만 원 공제

**사례 ③ (주)◆◆(일반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자동차부품 제조업

- 상장여부: 코스닥상장

<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7,000억	8,000억	8,500억	9,000억	9,500억
자산총액	3,000억	3,500억	3,800억	4,000억	4,500억
연구·인력개발비	20억	30억	35억	40억	45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일반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 증가분 방식:  $(45\text{억} - 40\text{억}) \times 25\% = 1\text{억 } 2,500\text{만 원}$
- 당기분 방식:  $45\text{억} \times \text{Min}\left(\frac{45\text{억}}{9,500\text{억}} * 50\%, 2\%\right) = 1,065\text{만원}$
- 따라서 (주)◆◆는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여 1억 2,500만 원 공제

**사례 ④** ◇◇(개인사업자)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상호: ◇◇ - 업종: 플라스틱사출 제조업
- < ◇◇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20억	25억	30억	30억	33억
자산총액	30억	33억	33억	35억	40억
연구·인력개발비	2억	2.1억	2.3억	2.5억	3.3억

■ 세액공제액 계산

- ◇◇는 중소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증가분 방식:  $(3.3\text{억} - 2.5\text{억}) \times 50\% = 4,000\text{만 원}$
- 당기분 방식:  $3.3\text{억} \times 25\% = 8,250\text{만 원}$
- 따라서 ◇◇는 당기분 방식을 선택하여 8,250만 원 공제

**사례 ⑤** (주)◇◇(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 사업자 개요

- 법인명: (주)◇◇ - 업종: 반도체 제조업
- 상장여부: 비상장
- 연구개발 활동: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중 ‘지능형 반도체·센서’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소재·장비’ 개발 진행
- < (주)◇◇의 매출액, 자산총액 및 연구·인력개발비 내역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2,100억	3,000억	3,500억	4,000억	4,500억
자산총액	2,000억	2,500억	3,000억	3,100억	3,500억
연구·인력개발비	4억	5억	5억	6억	8억

■ 세액공제액 계산

- (주)◇◇는 중견기업에 해당(판단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비용분:  $8\text{억} \times 20\% = 1\text{억 } 6,000\text{만 원}$
- 비율분:  $8\text{억} \times \text{Min}\left(\frac{48\text{억}}{4,500\text{억}} * 3.10\%\right) = 426\text{만원}$
- 따라서, (주)◇◇는 비용분과 비율분을 합산한 1억 6,426만 원 공제



◎ 증거서류 작성·보관 의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3항)

-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3항)
    - 다른 공제 제도는 대부분 업종, 외형, 지역 등 형식적 요건만 규정하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질적 요건까지 부합해야 함
    -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및 부당한 조세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함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운영하는 연구노트포털(<http://www.e-note.or.kr>)에서 연구노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⑬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⑰ 17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 II. 연구개발활동 검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위해 연구개발활동 검토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

**연구개발활동 사전심사 중 연구개발활동 주요 항목**

연구개발활동  
(정의\*부합 여부 확인)

\*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조특법§2)

### 01. 연구개발활동 정의

◎ 연구개발활동 개관(概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 과학기술 분야 또는 특정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 프라스카티 매뉴얼((OECD Frascati Manual 2015, 제7판)
  - OECD에서 연구개발(R&D)에 투입된 자금 및 인적자원에 대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통계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연구개발 지침으로
  - 지식의 집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인간, 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포함) 그리고 지식을 통한 새로운 응용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연구개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연구개발은 독창적 개념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결과물이 대체로 불확실하고(또는 적어도 결과물 달성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양이 불확실함),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거나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활동임
  - 이에 따라 특정 활동이 연구개발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다섯 가지 기준, 신규성(novel), 창의성(creative), 불확실성(uncertain), 체계성(systematic) 그리고 이전가능성/또는 재현가능성(transferable and reproducible)을 충족해야 함

**Frascati Manual, 2015, OECD(프라스카티 매뉴얼)**

〈 연구개발로 분류될 수 있는 특징 〉

신규성(no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활동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설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li> <li>예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이미 업계에 알려진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면 신규성이 없지만 연구개발 수행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결과물이 도출되면 신규성 인정 가능</li> </ul>
창의성(cre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활동은 기존 지식을 개선하는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창출을 목적으로 함</li> <li>예 데이터 처리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은 연구개발임</li> </ul>
불확실성(uncert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은 다양한 측면의 불확실성을 지님(연구개발 최종 결과물, 비용, 투입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움)</li> <li>예 종래 기술을 단순 변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이 아님(결과의 불확실성 부재)</li> </ul>

불확실성 (uncertain)	예 높은 실패위험을 갖는 기술적 개념을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음
체계성(systematic)	• 연구개발이 계획된 방법대로 수행되고, 진행된 프로세스와 결과물이 기록됨 예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구체적 목적과 연구개발 자원(인적, 물적)에 대한 자료가 있음
이전가능성, 재현가능성 (transferable, reproducible)	•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활동 결과를 재현(성공, 실패 모두)할 수 있어야 함 예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문서화시키는 것은 이전가능성이 있음

**‘연구개발 활동’의 판례상 정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2017.7.13.)**

- (기업응용연구) 과학기술 연구 및 성과를 기업생산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도 연구개발의 범주에 포함 가능하지만,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 (비연구활동) 상용화, 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다소 보완,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 편리함을 더하였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함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이 언급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543. 2020.5.8.)**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조특법 제9조제5항에서 ‘연구개발’의 개념으로 ‘과학기술 활동’이 처음 도입되었다. 위 개정 취지는 ‘연구개발의 정의 및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의 범위를 국제적인 기준[OECD의 연구개발(R&D) 개념]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위 법 개정 이후로는 쟁점 세액공제의 요건인 과학기술 활동인지 여부에 관하여 OECD의 연구개발 개념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OECD가 1963년부터 발간·개정해오고 있는 연구개발통계 조사 지침서인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에 따르면, ‘새롭고, 창의적이고, 불확실하고, 체계적이고, 이전가능하거나 재현 가능한 활동’만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은 혁신(신제품이나 상당히 개선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또는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신규 프로세스나 상당히 개선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것) 활동의 일부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S/W 개발 프로젝트가 연구개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종결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인 해소여야 한다. 기존 S/W 프로그램이나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는 수정 작업도 위와 같은 결과와 목적을 구비한다면 연구개발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에 미치지 않는 응용이나 개선 수준에서 이미 개발된 S/W 도구를 이용하여 기업용 S/W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도의 것은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비연구개발활동 개관(概觀)

- 연구개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연구개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프라스카티 매뉴얼에서 분류하는 연구개발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연구개발"을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제외한다고 정의함

####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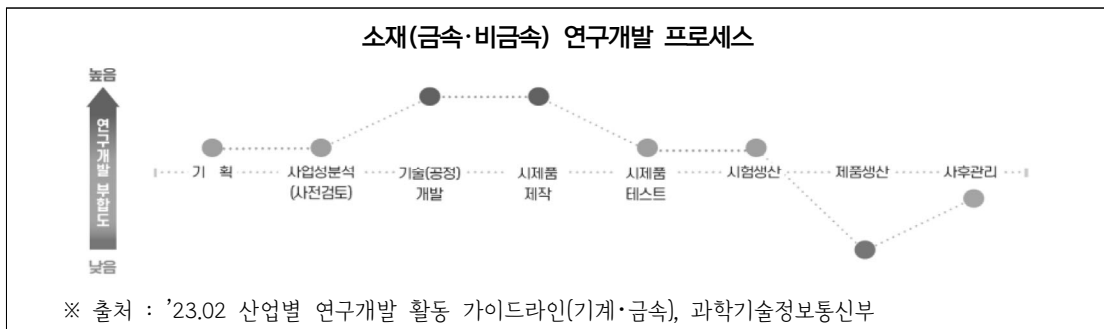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 02. 적격·부적격 연구개발활동 개관(概觀)

연구개발활동과 비연구개발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과
- ② 비연구개발활동으로 정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사례와 신청인이 혼동하는 사례를 추가하여 설명

### ◎ 주요 산업분야의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부합도



- (검토 대상 : 연구개발 활동 단계) 제품 제조(양산)이전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또는 기술(공정)을 구체화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을 통하여 최적화
  - 기획 단계 ⇨ 기술(공정)개발 ⇨ 시제품제작 단계 ⇨ 시제품시험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기술(공정)개발 최적화 과정의 시행착오 및 제품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사진 또는 연구노트 등)을 보관
  - 단순 고객대응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과 관련된 특수한 피드백 및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후관리 활동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개발완료 후 사후관리단계 활동의 특징
  - 시험생산 설비가 아닌 기존 제품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하거나 시험생산 결과물을 판매하는 활동
  - 제품 상용화 후 일반적인 시장 반응을 확인을 위한 소비자 테스트 활동
  - 판매된 제품의 기술지원, 고객불만요소 해소 및 판촉활동, 단순 고객 대응 목적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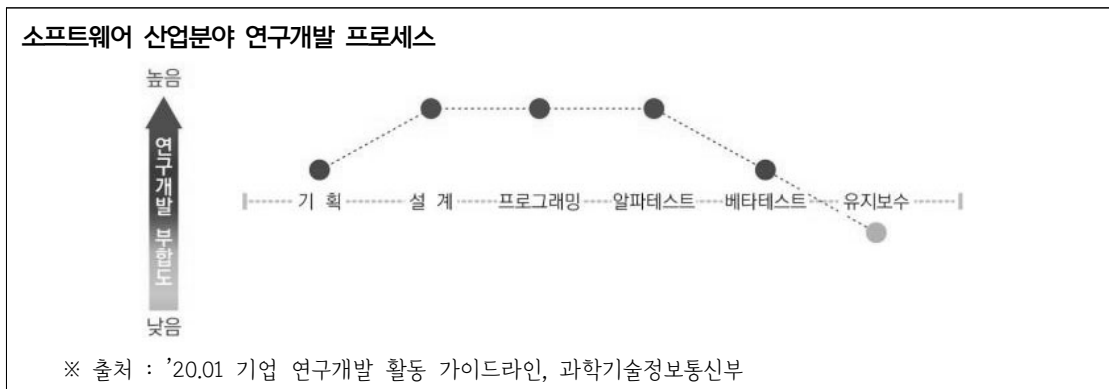


- (검토 대상 : 연구개발 활동 단계) 제품 제조(양산)이전의 시제품 제작과 검인증까지의 과정
  - 사업성 분석을 통한 업무 계획 수립과 중점 과제 구체화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목표(정밀도 및 기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컨셉 구체화
  - 제품의 성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SW, 소재, AI 등)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설계하는 단계
  - 고객사와 협의를 통한 시제품의 성능 및 기술에 대한 검인증(외부 기관을 통한 품질 인증, 안전 인증 등)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시험 생산 후 제품 생산 및 사후관리
  - 시험생산 설비가 아닌 기존 제품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하거나 시험생산 결과물을 판매하는 활동
  - 제품 상용화 후 일반적인 시장 반응을 확인을 위한 소비자 테스트 활동
  - 판매된 제품의 기술지원, 고객불만요소 해소 및 판촉활동, 단순 고객 대응 목적의 활동

－ 납품된 정밀기계장치의 유지보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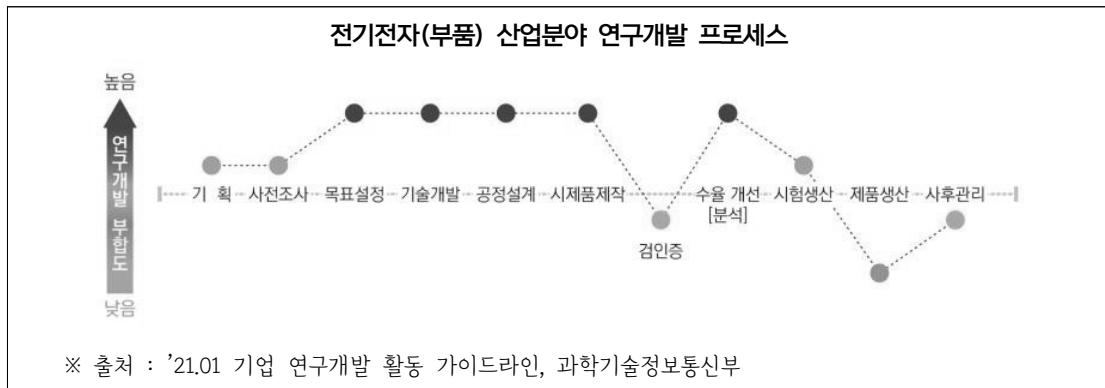


- (검토 대상 : 연구개발 활동 단계) 제품에 대한 검인증이 제품개발에 필수적인 개발활동으로서, 연구개발 과정 전체에 검인증이 관여함
  -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개발(자체/공동개발 또는 아웃소싱)수립, 통합인증 계획 수립
  - － 세부과제별 기본/상세 설계, 배치 설계 검토, 인증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마일스톤수립
  - －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인증 기분에 따른 시제품을 제작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단계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시험 생산 후 제품 생산 및 사후관리
  - － 기술개선이 없는 단순한 공정 최적화 과정
  - － 판매목적의 시제품을 시험생산한 경우
  - － 기술개선이 없는 단순 사후 지원 서비스
  - －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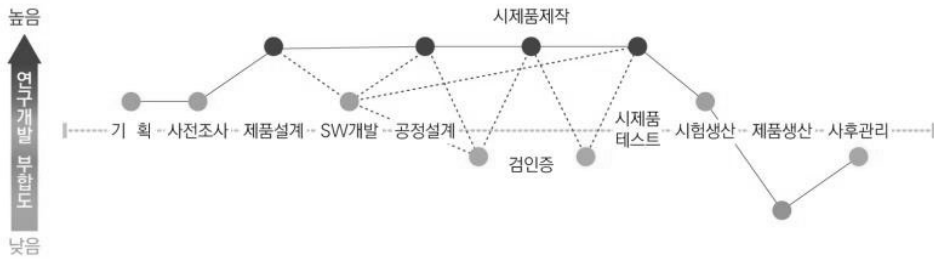
- (연구개발활동 단계) 기획 단계에서 유료 및 상용화가 되기 전 상태인 오픈베타테스트 단계까지의 과정
  - － 기획 단계 ⇨ 설계 단계 ⇨ 프로그래밍 단계 ⇨ 알파 및 베타테스트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아이디어 도출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수행되고 데이터 내용 및 객체 표현방식 설정 등의 구체화가 진행
-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실제 기술을 구현하고 테스트를 통한 개선방법 도출 등의 개발과정을 검토
- (비연구개발활동 단계) 기술 개발 완료 이후 유지보수단계 활동의 특징
  - 제품 출시 후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과 이를 통해 생긴 로그 수집/저장 등의 활동은 통상적인 유지보수 활동
  - 피드백을 위한 과정으로 수행되는 자료수집의 경우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인 연구개발에는 미치지 못함



- (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 생산(양산) 이전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또는 기술을 구체화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을 통하여 개선사항을 해결
  - 기획 단계 ⇨ 목표설정 단계 ⇨ 개발 단계 ⇨ 시제품 제작 단계 ⇨ 수율 개선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 다만, 산업 간 연구개발과 양산의 범위 및 단계는 상이 할 수 있음
  - 제작 및 성능 검증 이후 양산 단계로 진입하여 매출 활동에 기여
- (비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생산 및 사후관리 등 비연구개발 활동의 특징
  - 시제품을 제품 구동 여부 또는 수율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검인증, 영업,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
  - 제품 출시 후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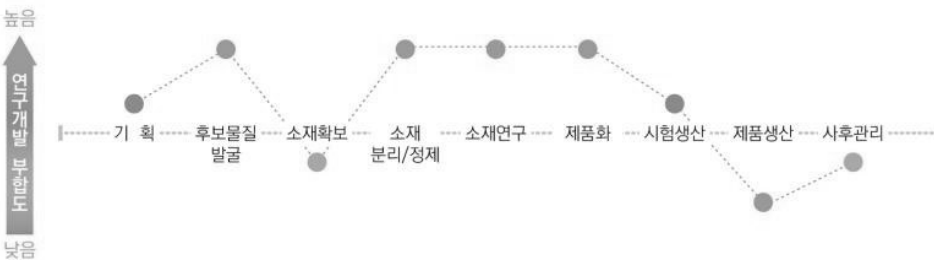
### 전기전자(완제품) 산업분야 연구개발 프로세스



※ 출처 : '21.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 생산(양산) 이전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 또는 기술을 구체화하고 세부 요소기술을 개발하여 제품을 설계
  - 기획 단계 ⇨ 제품 및 공장설계 단계 ⇨ 시제품 제작 단계 ⇨ 시제품시험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 다만, 산업 간 연구개발과 양산의 범위 및 단계는 상이 할 수 있음
  - 제작 및 성능 검증 이후 양산 단계로 진입하여 매출 활동에 기여
- (비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생산 및 사후관리 등 비연구개발 활동의 특징
  - 시제품을 제품 구동 여부 또는 수율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검인증, 영업,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
  - 제품 출시 후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

### 바이오소재 산업분야 연구개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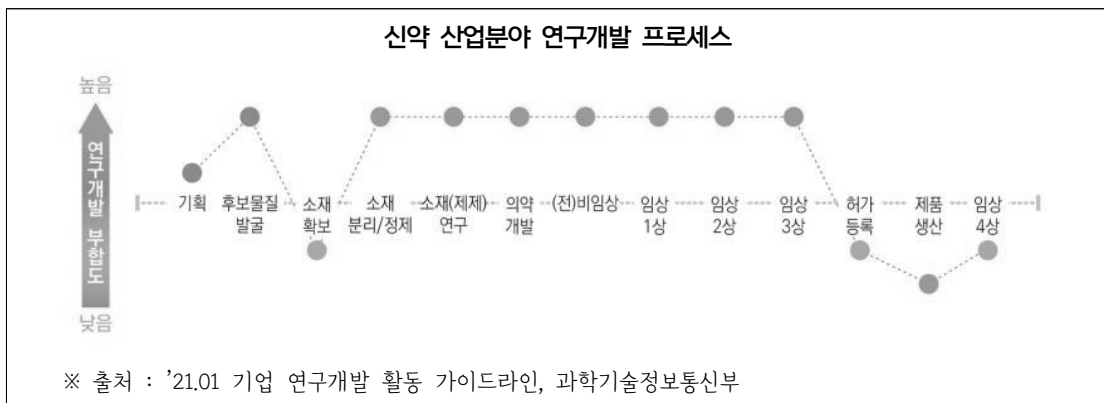


※ 출처 : '21.01 기업 연구개발 활동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활동 단계) 후보물질 발굴에서 소재연구 및 제품화 단계까지의 과정
  - 후보물질 발굴단계 ⇨ 소재분리/정제 단계 ⇨ 소재연구 단계 ⇨ 제품화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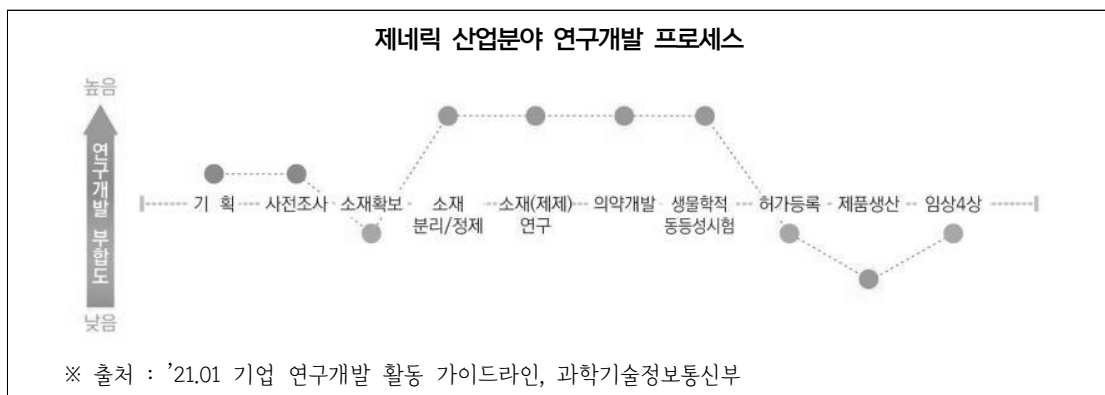


- 후보물질 발굴 시 기존 물질이 아닌 신물질에 대한 물성 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성분 추출 연구를 반복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
- 후보물질에 대한 성분함량 및 구조분석 등을 통해 최종 물성/안전성 확보
- 연구된 소재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기능, 설계 등을 창출, 개선하는 과정
- (비연구개발활동 단계) 제품 출시 이후 사후관리단계 활동의 특징
  - 실제 사용환경에서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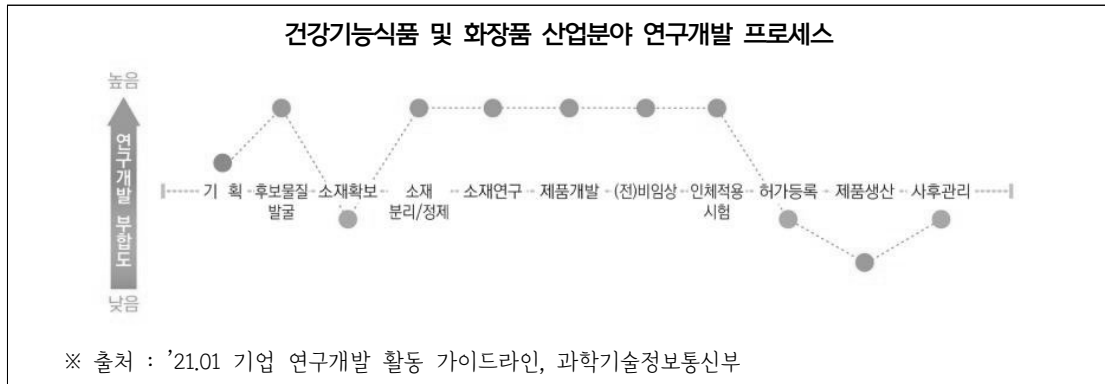


- (연구개발 활동 단계) 후보물질 발굴에서 소재연구 및 임상 단계(3상)까지의 과정
  - 후보물질 발굴단계 ⇨ 소재분리/정제 단계 ⇨ 소재연구 단계 ⇨ 의약개발 단계 ⇨ 임상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신약 개발의 경우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은 분야이므로 성공/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연구자료의 보관이 중요
- (신약 개발 단계별 주요 프로세스)
  - 후보물질 발굴: 약물 타겟을 억제하기 위한 화합물질 합성, 기존 소재 데이터 분석 또는 천연물 추출 연구를 반복하여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
  - 소재(제제)연구: 투여가 용이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
  - 전임상: 체내동태연구와 약효약리연구 및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검사
  - 임상1상: 소수의 건강한 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정성과 내약성 평가, 효능에 대한 일차적 근거 확보
  - 임상2상: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응증과 용법, 용량을 결정
  - 임상3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요법과의 결과 비교 및 의약에 대한 장기 안정성 평가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허가 완료 이후의 활동, 개발과정에서 연구지원 및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 자에 대한 인건비
  - 임상4상은 제품 출시 후 환자들에게 투여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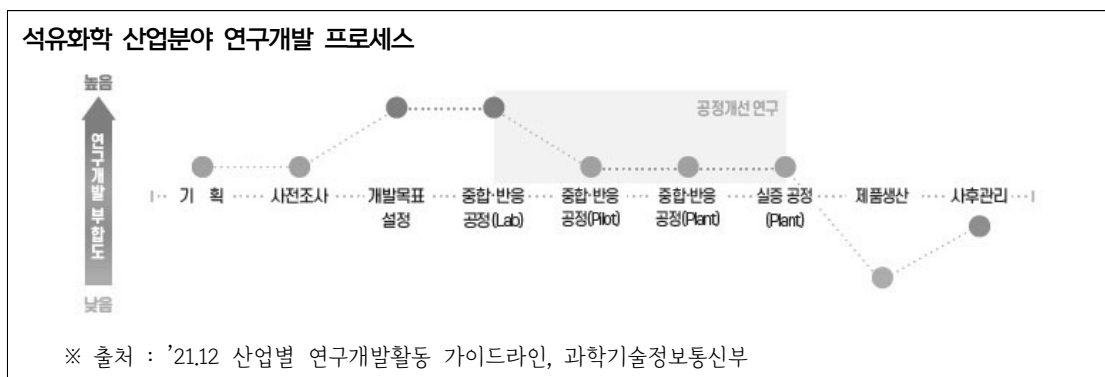
- 추가 조사 및 연구로 통상적으로 임상4상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허가 완료 이후 수행하는 활동은 통상적으로 연구개발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임상3상 시험의 적합한 실시를 조건으로 하는 품목허가를 받고 판매 중인 의약품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임상3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내국법인이 자체 개발하여 국내 판매 중인 의약품의 국외 판매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국외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로 인정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98, 2021.09.03.)
  -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등 위탁용역 계약체결, 단순 모니터링, 대관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연구지원, 연구 행정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연구개발 활동 단계) 후보물질 체계화에서 소재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까지의 과정
  - 대조약과 동등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용출평가, 분해시험 등의 각종 비교 평가와 제제 연구활동이 필수적으로 수반
  - 후보물질에 대한 성분함량 및 구조분석 등을 통해 최종 물성/안전성 확보
- (제네릭 개발 단계별 주요 프로세스)
  - 소재(제제)연구: 투여가 용이하고 약리효과가 최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임상시험의 일종으로 주성분 및 함량,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허가 완료 이후의 활동, 개발과정에서 연구지원 및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한 자에 대한 인건비
  - 임상4상은 제품 출시 후 환자들에게 투여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증상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연구로 통상적으로 임상4상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제네릭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등 위탁용역 계약체결, 단순 모니터링, 대관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연구지원, 연구행정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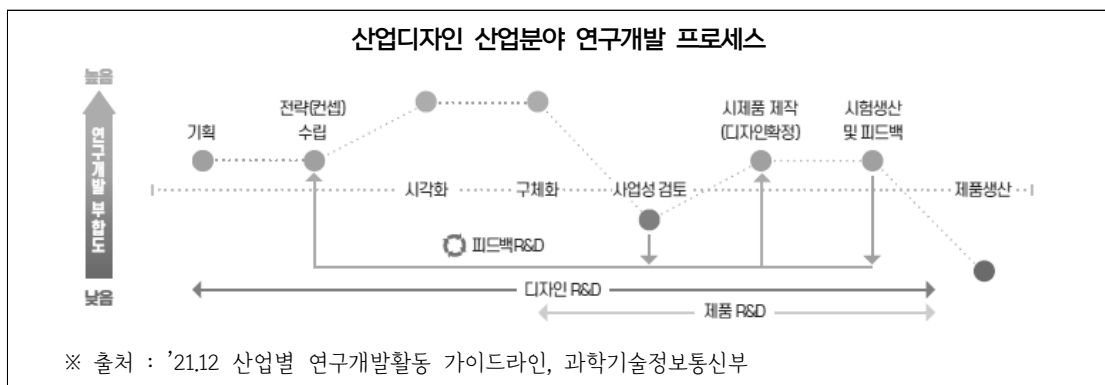


- (연구개발활동 단계) 후보물질 발굴에서 소재연구 및 인체적용 시험까지의 과정
  - 후보물질 발굴단계 ⇨ 소재분리/정제 단계 ⇨ 소재연구 단계 ⇨ 제품개발 단계 ⇨ 임상 및 인체적용시험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동물 또는 세포 실험을 통해 부작용 및 독성을 검색하는 안전성 평가
  - 특정 식품 및 화장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시험 또는 중재시험 실시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인체적용시험 이후 단계 활동의 특징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 안정성과 기능성을 입증하여 허가를 취득하는 허가등록단계는 통상적으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사후관리 단계에서 단순 고객대응을 목적으로 피드백을 수집하는 활동



- (연구개발 활동 단계) 개발목표 설정에서 공정개선 연구 및 실증화 단계까지의 과정
  - Lab. 스케일 중합·반응평가 및 공정개선 평가 ⇨ Pilot라인 중합·반응평가 및 공정개선 평가 ⇨ Plant 실증공정 ⇨ 제품화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 유지
  - 중합·반응평가는 정유화학 공정을 통해 분리된 기초유분의 중합 또는 촉매반응을 통해 Lab. 및 Pilot 수준에서의 목표제품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

- 최종 생산제품이 중간재의 형태인 기초화학 제품인 이유로 고객사의 실증 평가결과를 반영한 제품 특성 개량 및 공정개발이 수반됨
- 소재의 제품화를 위해 필요한 합성법, 물성, 스케일업 등을 창출, 개선하는 과정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단순 맞춤형 제작 및 사후관리 활동
  -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의 사후관리 활동은 통상적으로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기존 기술 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다소 변형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 제작 활동 및 기술영업



- (연구개발 활동 단계) 창작 및 개선을 위해 피드백을 통한 순환형 과정
  - 산업·시장분석, 소비자분석을 통한 기획 ⇨ 기획 방향에 따른 컨셉 수립 ⇨ 아이디어 시각화 단계 ⇨ 구체화 단계 ⇨ 디자인 확정 단계 순서의 흐름 체계유지
  - 스케치 등을 통해 전반적인 디자인 방향성과 기본적인 형상을 이미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수립
  - 시각화된 스케치 결과를 2D, 3D프로그램 등의 방법을 통해 구체화 진행
  - 결정된 디자인을 반영한 시제품 제작, 피드백 통한 개선사항 탐색, 세부디자인 최종 확정
- (비연구개발 활동 단계) 제품생산 단계 등 비연구개발 활동의 특징
  - 구체화된 디자인에 대한 제품 출시 및 상용화를 위해 사업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활동
  - 시장분석과 리서치를 통한 기획·컨셉개발 등의 구체적인 개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디자인 결과물만을 토대로 제품생산을 검토하는 활동
  - 타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디자인 결과물 혹은 생산작업지시서만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

● 부정적 연구개발활동 유형

	비연구개발 활동	세부내용
1	창의성·차별성 없는 일상적인 개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래 기술을 단순 변용하는 수준의 일상적인 개선 활동이나 맞춤형 제작활동</li> <li>예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일상적인 가공 활동, 양산준비 활동, 정기적인 앱 업데이트, 고유디자인으로 볼 수 없는 편집 활동, 일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교육자료 집필활동, 제조 작업일지를 연구노트로 작성, 범용 기술을 이용한 제품제작, 과학적 분석 없이 음식 레시피만을 단순 개선하는 활동,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는 활동</li> <li>• 관련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2017.7.13. 조심2016중3124, 2017.3.29.</li> </ul>
2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및 용역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자에게 비용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개발로 연구결과물 등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용역활동으로 연구용역비 매출 발생이 확인된 경우</li> <li>예 수탁연구활동, 일반용역활동</li> </ul>
3	지식 향상을 위한 단순 조사·인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문과 인터넷, 특허, 정부지원과제 결과물 등의 공지된 정보를 단순 인용하는 활동으로 실제 개발로 연결되지 않는 수준의 조사·인용</li> <li>예 타사 정부지원과제·특허·서적의 내용을 단순 요약한 연구자료, 타사의 과거 특허를 복사하여 출원하는 활동</li> </ul>
4	체계적이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연구증거 불충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된 연구개발보고서나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등, 회의록, 지식재산권)를 통해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구증거가 부족한 경우</li> </ul>
5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생산관리 및 지원업무</li> <li>예 생산관리 체계 개선, 파일럿 라인 관리, 위탁과제 관리, 인증을 위한 행정업무, 양산을 위한 행정업무, 환경 안전 업무, 연구실 안전 관리 업무</li> </ul>
6	과제연도 이전에 수행한 연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연도 이전에 개발이 완료된 과거 연구결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시한 경우</li> <li>예 과거 출원한 특허·논문·정부과제 결과물, 양산 중인 제품에 대해 과거 개발한 개발자료, 그 외 과거 수행한 연구 증빙자료</li> </ul>
7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영업 활동</li> <li>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고객사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자사 제품을 추천하는 활동, 고객사 프로모션용 데모장비 제작 활동</li> <li>• 매출향상을 위한 시장조사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li> <li>예 차기 제품에 적용할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시장조사 활동, 신제품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광고용 이미지를 촬영하는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전담요원이 반드시 수행할 이유가 없는 품질시험 활동 예) 일상적인 품질평가, 품질보증업무, 원부자재 입출고 검사</li> </ul>
8	반복적인 정보수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는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예)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는 활동, 관련법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활동</li> </ul>
9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과 관련이 낮은 경영·관리 등의 분야에서 효율성을 개선하는 활동 예) 사업확장을 위한 조사 활동, 재고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사 제품군 조사 및 통합 활동</li> </ul>
10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 도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 등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도입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이거나 스마트팩토리 등을 도입하는 활동으로 자체개발과 구별되는 활동</li> <li>관련 사례 : 조심-2015-부-2443, 2018.10.29.</li> </ul>
11	유지보수나 단순 기술지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산·납품·서비스 중인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나 간단한 기술적 결함에 대한 지원, 현장지원 및 영업지원 업무, 현장 교육, 영업 연장선에 있는 제품 교육 등이 포함됨</li> </ul>
12	기타 불인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 전담부서 등록 전이거나 취소 이후에 수행한 연구활동</li> <li>수탁받은 과제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활동</li> </ul>

### 03. 연구개발활동 사례

적격/부적격 연구개발활동 유형을 사례로 소개하고 예규 및 판례를 통한 판단기준 및 사유 제시

#### ● (적격) 연구개발활동 사례

항 목	내 용
자체 선행 연구개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화 이전 신제품 제작 및 사업 다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실시, 연구노트 및 결과보고서 구비</li> <li>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위탁 또는 수탁이 아닌 자체 연구개발 과제로, 기술적 진전 및 고유성이 확인되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li> </ul>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료(유효성분)의 신규성이 인정되며 개발 관련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li> <li>특허등록 및 정부지원과제 활동서류를 통해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li> </ul>

자체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양산준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사로부터 부품 생산 의뢰받아 납품하기 위한 양산준비단계 활동에 해당하여도 당사가 연구개발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여 연구개발에 따른 지적재산권과 같은 성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자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li> </ul>
고객사 요구사항 기반 신기술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매 및 양산 계약 이전에 고객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활동은 신규성이 인정되며, 연구 증빙자료를 통해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시제품 제작 및 시험 활동이 확인되어 적절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li> </ul>
기존 프로그램을 윈도우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형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프로그램을 변형하는 활동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에 해당하지 않아도 연구 증빙자료를 통해 기존 시스템들의 구조 변경 활동과 기존 데이터 무결성 보장을 위한 실험적 활동 및 결과적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창의적 과정을 확인하고, 프로토타입 제작 후 특정 제조공장에 시범 적용과 통합테스트 활동 및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이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li> </ul>
UX 인터랙션 디자인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며 행동하는 ‘상호작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랙션디자인을 진행한 활동</li> <li>• 고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기초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는 활동에 해당되고, 신규성·창의성·체계성이 확인되면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li> </ul>
제네릭 의약품 개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함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불확실성을 내포한 의약품 개발 활동을 연구개발로 인정</li> <li>* 제네릭 의약품 :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원개발 의약품)과 동등한 의약품</li> </ul>
소재 합성 공정개선 및 유해성 원재료 대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양산 중인 소재의 제조공정 수를 줄이고, 유해성이 높은 원재료를 대체하기 위한 합성법 개발 활동은 신규성을 내포한 활동이며, 합성법 개발과정에서 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확인될 경우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 가능</li> </ul>
프로그램의 인식률 개선을 위한 고도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을 불량으로 인식하는 ‘과검’과 불량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검’ 발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영상의 특징을 반복 학습하고, 알고리즘개선으로 인식률 향상 활동을 수행하여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화 과정 확인</li> <li>• 고도화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보고서에 기록된 고도화 과정에서 창의적 해결방법 및 체계적인 실험과정이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li> </ul>
과제연도 이전에 등록된 특허를 적용한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연도에 등록된 특허에 대해 초도양산을 목적으로 시제품 제작 및 개선 활동, 성능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법정인증 획득 과정 확인</li> <li>• 이전연도에 개발된 기술이라도 시제품 제작 및 양산전까지의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li> </ul>

공연기획 및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컨셉설정,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명, 사물, 세트, 인원 배치,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각도 등 공연 공간구성 요소를 정하는 활동을 확인함</li> <li>• 기획부터 컨셉 설정까지의 구체적인 기획서와 3D 모델링한 디자인 결과물, 시안 개발과정, 실제 공연에 적용한 결과 등 구체적으로 기록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li> </ul>
기존 제품에 대한 원가절감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제품 대비 동등 수준의 특성을 갖는 고분자 화합물 제품개발 과제 임</li> <li>• 고분자 경화반응 메카니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원료 W와 X를 저원가 Y와 Z로 대체하는 시험·평가 활동 확인됨</li> <li>• 과제 기획 및 설계, 개발 품의서 확인되고, 설정된 시험·평가 방법 및 계획된 기간에 수행한 시험·평가 실험과 결과 내용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li> </ul>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 커스터마이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자사 제품의 드론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과제로 신청</li> <li>• 범용 라이브러리를 응용하여 과학적·기술적 진보 없이 개작하는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 어려우나,</li> <li>• 드론 제어를 위한 새로운 관제 시스템 개발과제와 라이브러리 개선과제의 개발기간과 목적이 동일하고, 관제 시스템 개발과제에 라이브러리가 활용 및 시험·테스트 되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버전 관리 체계가 확인되어, 새로운 관제시스템 개발과제(Main Project)의 하위 활동으로 보아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li> </ul>

● (부적격)연구개발활동 사례

항 목	내 용
측량 업무 효율성 향상 목적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사업 입찰을 위해 상용 측량 제품 및 드론을 이용, 지형물을 단순 촬영 및 데이터 저장 활동은 기존 측량 업무 효율성 향상에 가까우며 과학·기술적 진전이라 볼 수 없고, 차별성과 고유성을 지닌 결과물도 아니므로 불인정</li> </ul>
기능적 저작물의 설계용역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상복합 형태의 구조물은 이용자 편의성과 실용성이 부각된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의성이 요구되는 디자인 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li> </ul>
연구개발 기획이나 계획 없이 개연성이 적은 연구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산 장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여러 납품 장소에 무상으로 설치하고 국내의 지리적 상황과 환경에 적용(테스트)하는 활동, 환경별 성능향상을 위한 활동, 문제해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현장(테스트) 사이트 구축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 설치 후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납품(계약)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확인되고, 이러한 활동은 일부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li> </ul> </li> </ul>



	<p>과 유사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점 발생 시 부품 변경 또는 약품의 비율 조절을 통해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창의성, 재현성, 불확실성이 없으며,</li> <li>- 연구개발 활동의 명확한 목표 및 체계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li> </ul>
판매중인 제품의 반복적인 품질검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에 개발을 완료한 후,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 연장을 위해서 실시되는 반복적인 품질검사는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li> </ul>
고객사의 요청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제품특성 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사의 불량분석 활동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제조공정 개선 요청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활동</li> <li>- 수탁사의 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 응대·불만 해소 등의 사후관리와 유사한 활동에 해당하여 불인정</li> </ul>
상용기술을 단순 적용한 연구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법인이 제시한 공법은 관련 분야의 상용화된 공법으로 해당 공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기존 기술 대비 개선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공법을 단순 적용하는 활동에 불과하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li> </ul>
타기관 수행한 국가R&D 과제 결과물을 복제하고 재현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R&amp;D과제로 타 업체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가 공개된 기존 연구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로 불인정</li> </ul>
기술지원 및 교육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에 개발자료를 지원하거나(기술지원) 관련 장치 교육활동은 자체 연구개발 활동이 아닌 기술지원 활동이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li> </ul>
고객사 생산현장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연구소 내 전담부서 인력이 고객사에 파견되어 제품개발을 수행한 행위는 사실상 수탁용역에 해당</li> <li>-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li> </ul>
소프트웨어 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능향상 등 목표가 명확한 연구개발이라도 표준 또는 오픈 라이브러리나 소스, 프레임워크, 개발 언어 등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적용하는 활동</li> <li>• 시행착오 과정을 거칠 뿐, 연구개발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li> </ul>
인테리어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oT 적용 사례 및 기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지식을 의뢰받은 시공 현장에 적용(설계)하는 활동을 수행하였고, 의뢰사의 요구로 관련 활동이 중단 또는 축소된 정황 확인</li> <li>- 시장조사와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li> </ul>
편집디자인의 단순 반복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채 등의 결합을 디자인한 활동이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기적으로 레이아웃 배열 변경만 진행하거나 기존에 제작된 이미지 혹은 사진들을 단순 편집하는 활동은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이 낮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li> </ul>
타사 문헌을 인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사 또는 타사의 과거 발행된 문헌을 단순 인용하는 경우는 신규성 및</li> </ul>

연구개발 활동	독창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인정할 수 없어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과거 연구개발 활동	• 법인이 제출한 활동 내용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나, 과거에 이미 진행 완료된 연구 활동들로 확인되어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불인정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	• 이전받은 소프트웨어의 안정화 활동과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발, 시스템 결합 수정, 시스템 성능 고도화 활동 등은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발활동으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원가절감 목적의 원자재 대체만을 수행한 활동	• 원가절감 목적으로 타사에서 공급하는 동일한 구조 및 성분의 원자재로 대체하는 활동만을 수행한 신청법인의 활동은 기술적 진보를 위한 활동과 거리가 있는 일상적인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고객사 현장평가 및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 추천 활동	• 고객사 방문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해당법인의 양산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활동은 매출증대, 기술지원이 목적인 영업활동으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고객사의 구체적인 요청을 반영한 생산설비 개조 활동	• 실질적으로 기술적 문제해결은 고객사의 분석활동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수탁받은 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임가공 활동만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개발활동으로 불인정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지식 습득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과 사례·시장조사와 같은 활동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됨 • 연구목표와 주요 연구내용 간에 연관성이 없으며, 연구 과정 중 다양한 아이디어 및 개발 방향 도출 및 후속 연구개발 계획이 없음 - 신규성, 창의성, 불확실성, 체계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고객사 의뢰 양산준비 활동	• 법인이 고객사로부터 부품 생산 의뢰받아 납품하기 위한 양산준비단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
기존 개발된 모델 및 방법을 활용한 컨설팅 연구 활동	• 기존 경영 산업 및 동종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비즈니스 모형·모델을 토대로 컨설팅 연구가 진행되어 새로운 방법(신규성) 및 창의적으로 도출한 결과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정량적(통계 및 데이터 등 근거자료)·정성적(심층인터뷰 등) 체계적인 연구진행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
병원 내 연구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 연구개발 결과물로 제출한 논문에서 전담연구원들이 저자로 등재되어있지 않고, 전담연구원들의 전공과 경력이 의료분야 및 연구개발 분야와 무관하며, 연구 증빙자료를 통해 설문조사·정보수집·고객응대·고객관리한 활동을 확인 • 체계성·창의성 있는 연구개발활동 보다는 병원 내 지원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자원관리시스템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이 시스템을 기

지원사업 참여 활동	<p>업이 운영하는 공장에 도입하기 위한 활동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li> </ul>
유통기업의 상품기획, 시장조사, 품평 활동 등 신제품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경쟁제품 후기 분석과 시장조사 등을 통한 상품기획 활동과 협력사가 제작한 시제품을 이용한 품평(사용감 등) 활동, 품평 활동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수집된 내용을 정리하여 협력사에 피드백하는 활동이 확인됨</li> <li>•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제품개발에 직접 대응되는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유통업자 본연의 일상적인 상품개발 활동으로 보아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li> </ul>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적용된 제품 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함</li> <li>• 과제협약서와 과제계획서를 통해 신청법인이 개발된 제품을 서비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과 검증, 제품 및 기술 홍보, 해외 수요기업 발굴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협약된 것을 확인함</li> <li>• 과제 연차보고서를 통해 해당연차에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조사 및 동향 파악과 분석한 활동이 확인되어 연구개발 활동 불인정</li> </ul>

## 04. 예규 및 판례

### ● 주요 예규 및 법원 판례

**제목** 조심-2022-서-5721, 2023.07.06.

쟁점연구소에 대한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청구법인은 판촉물 도매 및 프랜차이즈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인쇄물 출판 디자인 연구소 직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연구소 직원들이 디자인 관련 연구업무만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지원팀 업무도 같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연구소 직원들의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한 결과물인 연구자료를 보면 대부분 사진 및 배경그림 등을 결합한 디자인에 불과하여 이는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의 직원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목** 조심-2023-중-0403, 2023.08.17.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목** 서면-2021-법인-7893, 2022.04.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 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제목** 조심-2022-서-7288, 2022.12.21.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과 전자·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생 산업체로 쟁점부서(선행기술1·2팀, 금형기술팀 및 신차품질1·2팀 총 5개 팀을 합하여, 이하 "쟁점 부서"라 한다)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쟁점부서가 시 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재료비·금형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한다고 보면서도, 쟁점부서가 시제품 제작 이외에 고객사의 요구조건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일반적인 신제품에 대한 상품화개발과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제품 제작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고 인건비 중 시제품 제작 관련분을 안분·계산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부서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그러나,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전담부서 등의 소속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서의 인건비가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목** 조심-2021-인-5767, 2022.12.06.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은 자동차주행 소음저감 장치에 필요한 자동차부품(헤드라이너 등)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금형비는 신차 양산 전에 설계품질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작(내구나 법규대응 확인단계로 생산라인을 통하지 않고 제작)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금형인 시작금형을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제목** 서면-2021-법인-7512, 2022.04.22.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제목** 조심-2022-중-2360, 2022.08.02.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 ♣ 요 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상복합 주택과 상가 건물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정설계, 시설물 구조 설계 활동 등의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므로 디자인의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제목** 조심-2021-서-5176, 2022.09.07.

쟁점위탁개발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 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시행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디자인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위탁개발비는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개개의 아파트별로 공급조건(토지 형태, 지반조건 등)이 달라 공급조건에 맞춘 디자인 설계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건축활동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설계활동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대상인 연구개발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목** 조심-2022-부-7135, 2023.02.14.

청구법인이 지출한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외주가공비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청구법인은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 디자인 위탁개발비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해 지출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제출한 디자인 샘플, 작업지시서, 설계요청서 등에 따르면 기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들을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목** 조심-2022-중-5657, 2023.06.26.

쟁점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은 건축, 토목, 주택건설 및 플랜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사법」 등에 따라 다른 건설사들과 같이 설계업무는 외부설계업체 등에게 위탁하고 시공 위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지출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건축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는 행위는 실패위험 등이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아니라 건설사 설계 겸업금지에 따라 건물의 시공시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불과하여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목** 사전-2022-법규법인-0133, 2022.04.25.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적용 방법

♣ 요 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의 비율을 적용받는 기간까지 해당 비율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목** 조심-2021-전-4790, 2022.02.08.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제품 제작 프로세스,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업무분장표·개인별 직무조사표·생산 문서목록, 품질○○○팀의 기술보고서, ○○○기술팀의 회의록 및 ○○○보증팀의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에 의하면,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시제품의 검사·시험 등 시제품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시제품 검사 및 납품수량, 양품 10개 생산 시 소요되는 시사출·검사·시험시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객사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540대의 CPM(Cockpit Module) 시제품 조립차량을 공급하고, 양품 10대 생산 시 소요되는 시사

출·검사·시험시간이 38~113근무일로 나타나며, 고객사의 Full Change 시제품 공급요청이 적었던 2017년과 2018년에도 Minor Change 시제품 납품수량이 각각 3,306건, 3,228건으로 나타나는바,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시제품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조세심판 관회의에서 신차개발 전담인원은 양산부서와 구분되어 시제품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전담부서 소속의 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 등의 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판단됨

**제목** 조심-2020-서-8452, 2021.07.28.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된 외주비용 및 디자인공모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청구법인의 건축설계 결과물은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 바,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비용(쟁점비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의 한 유형으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였다면 이는 과학적 내지는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것(조심 2012서740, 2012.7.12.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은 별도의 고유디자인개발팀이나 디자인개발부서를 두지 아니하고, 관련 프로젝트는 376건에 이르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상의 컴퓨터그래픽 및 모형 제작에서 과학적 내지 기술적인 진전이 있다고 할 만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서 컴퓨터그래픽 및 모형에 대한 위탁제작업무의 상세내용은 청구법인 업무결과물인 설계 등에 대한 건축주 또는 발주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이나 건축물 모형제작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이라기보다는 건축주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래픽이나 모형자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제목** 조심-2020-인-0941, 2020.11.24.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부서에서 발생한 쟁점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5항은 연구개발 활동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으로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부서는 제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부서의 업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목** 조심-2019-서-3360, 2020.10.05.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비용(①스토리보드·콘티, ②미술·분장, ③특수효과, ④컴퓨터그래픽 관련 위탁용역비)은 영화제작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보이므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을 보면, 일반적인 영상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쟁점비용은 당해 세액공제대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목** 조심-2019-중-3869, 2020.9.9.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국외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의 한 부분으로서 쟁점 해외위탁개발비를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제목** 서면-2019-법인-0284, 2020.07.10.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요 지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목** 조심-2018-서-4968, 2019.05.13.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 지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 비용은 제외한다"고 규정(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개정 당시 전산시스템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ERP 등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입법기술상 지속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행 조특법은 주로 중소기업들이 소규모로 투자하는 ERP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모두 배제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차세대'라 명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이 'ERP 등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의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일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

비'라는 'ERP 등 시스템'의 본질적 속성에 포섭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개발비를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정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목** 조심-2018-중-3161, 2018.11.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활동이 없거나 전담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요 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군에 납품한 장비에 대한 사후관리, 유지보수 및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습득한 애로 사항이나 노하우 등을 보고서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이를 ○○○에 통보하거나 매년 교육교재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것으로는 조특법 제9조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인 연구개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설령 청구법인이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본 직원들의 인건비는 경영팀과 교육팀에 소속된 직원들의 것으로 이들은 청구법인의 인사, 총무, 사업관리 등의 업무나 장비의 운용·정비교육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연구개발에 전담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에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법인세 처분시 쟁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목** 조심-2015-부-2443, 2018.10.29.

청구법인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등에 의하면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방카슈랑스·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모바일 등으로의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조특례법 개정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추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분 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특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목** 조심-2018-전-2445, 2018.10.25.

쟁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 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건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디자인샘플 등에 의하면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진수 중 특허출원 신청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진수가 소수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 및 조특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목** 조심-2017-서-0262, 2018.09.05.

쟁점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이 사건 대상작품인 ○○○의 CG작업 전·후의 사진자료를 비교해보면 기존 사극 등 다른 영상물의 장면과는 달리 전문디자이너의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므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0서2919, 2011.07.20. 및 조심 2010서 383, 2010.06.09. 등 같은 뜻),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물품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이런 고유성이 인정되어 컴퓨터그래픽팀의 직원이 이 건 작품에 사용된 일본배의 그래픽 소스를 방송사에 제공한데 대해 검찰에서 동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세관청도 같은 이유로 방송사 등이 CG비용을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으로 보아 한 결정청구에 대하여 환급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방송사, 게임회사 및 애니메이션 회사 등의 디자인비용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영화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 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용대상 비용 및 세액공제율 등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목**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05, 2018.06.01.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해당 여부

♣ 요 지

게임S/W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게임 그래픽 부서에 소속된 디자이너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인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디자이너의 인건비는 조특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목** 조심-2017-서-4669, 2018.01.31.

쟁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디자인팀과 SI팀으로 구분되는 디자인실 중 디자인팀은 브랜드별 컨셉과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고 각 제품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나, 제품포장 디자인, VMD, 광고 관련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SI팀의 활동은 제조부서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제목**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 2018.01.09.

조특법 제9조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 ♣ 요 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특법 제9조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더욱이 범용성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소재의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화학제품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활동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재의 단순 변용, 개선이나 개별 고객의 주관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 등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연구원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들과 함께 출장상담을 다니는 등으로 수행한 ○○○업무라든가 고객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 등은 대부분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의 경우에도 그 상당부분이 고객사의 공정개선, 교육활동, 기술지도 등으로 보일 뿐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직전 소송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05 판결(2017.07.13.)

**제목** 조심-2017-중-2339, 2017.08.24.

쟁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비용은 단순히 조특령 〇〇〇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 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목**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요 지

구 조특법 제9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해당할 것을 그 핵심적인 지표로 함. 이 때 순수한 기초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연구 및 성과를 기업생산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도 연구개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기존에 이미 상용화, 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다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할 것임

**제목** 조심-2016-중-3124, 2017.03.29.

쟁점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외부의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영화상영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 바, 동 쟁점 비용은 영화상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이는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특령 제8조제2항제1호의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비용을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목** 조심-2016-서-2469, 2016.11.10.

잡지를 출판하는 청구법인의 디자인 관련 경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독창적인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잡지같은 간행물에 들어가는 글, 그림, 사진 등의 편집·배치 작업을 디자인의 개발로 본다면 사실상 모든 간행물의 제작이 이에 포함될 수 있어 일반적인 편집업무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디자인 개발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한 디자인의 개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목** 조심-2016-중-0833, 2016.08.31.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시행령 제8조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에서 수행한 샘플패턴의 제작과 봉제는 샘플패턴의 배치에 따라 더 많은 의류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일 뿐 고유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목** 조심-2016-서-1351, 2016.10.06.

쟁점 인건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요 지

○○○협회가 발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에서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과학기술분야로 한정되고,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기업부설연구실적 신고서상 쟁점 연구소의 주 연구내용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개발이고, 2010년 쟁점 연구소의 조직도와 업무기술서 등에 의하면, 초등수학, 중등수학, 초등과학, 중등과학 및 유아팀으로 팀이 분류되어 각 팀별로 콘텐츠 개발 및 교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인건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목** 심사-법인-2016-0012, 2016.06.10.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 요 지

청구법인은 기술개발팀을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추어 (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1999.07.21.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고, 청구법인이 2013.12.23. 사업장 소재지를 당초 □□시에서 ○○시로 이전하고도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그 변경일로부터 14일이 훨씬 지난 2015.11.19.자에 비로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사실 없고, 그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어, 청구법인의 기술개발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건의 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의 이전신고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거나, 인정기관이 인정한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기술개발팀에서 수행한 품질관리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생산부서 등의 지원업무가 아닌 연구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의 범주에 속하는 업무라고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재지 이전 기한내 미신고,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제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2015.11.12.

실내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조특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목** 서면-2015-법인-1108, 2015.09.17.

영상디자인 개발업무 관련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 요 지**

조특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영상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 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목**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202, 2015.05.01.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원고의 등록 상표 또는 특허를 보아도 원고는 문제된 과세기간 동안 새로운 교재 또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도 주로 교재 개발 및 교재를 이용한 교육 방법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연구원들 중 일부는 시험감독이나 달력 제작 등 교육 방법 연구와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의 수상 분야 역시 영어학습 분야임

이와 같은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 내역, 연구원들의 업무 내용, 원고의 등록상표 및 특허의 내용, 수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 개발 내역, 등록 상표 및 수상 실적만으로는 이 사건 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제목** 조심-2013-서-0876, 2015.04.28.

쟁점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조심 2012서3056, 2012.9.24.,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2쟁점위탁개발비에 대한 개발활동을 수행한 수탁기관에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제2쟁점위탁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제1쟁점위탁개발비(○○○원)는 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이라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에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 점, 일부는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으로서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쟁점위탁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제목** 대법원-2013-두-22147, 2014.03.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 ♣ 요 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01.19. 선고 99두8718 판결 참조),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제목** 대법원-2008-도-29, 2009.01.30.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요 지

구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음. 한편, 구 저작권법은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조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대법원 2005.01.27., 선고 2002도 965 판결 참조). 그리고 어떤 아파트의 평면도나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심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바, 2006년 7월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기획 대표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획에서 제작

한 아파트백과 책자 내용을 불법으로 복사한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피고인 회사명을 기재하여 피고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소외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

## 05. 기타

### ● 연구개발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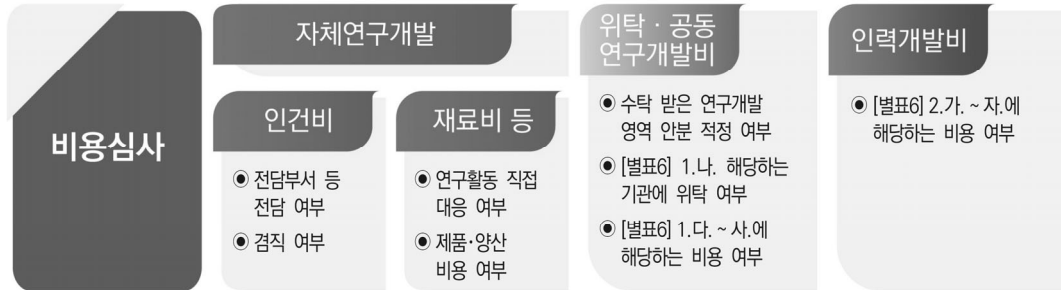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연구개발 여부) >

사업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항목	검 토 사 항		적합 여부	
연구개발적격요건	연구개발활동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의 정의에 부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 신기술개발, 신기술 창출, 서비스개발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 수행 등			
		판단 기준	내용		적정 여부
		신규성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 대비 기능적 변화, 성능 및 자체 디자인 개선활동		
			신제품이나 공정 설계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 및 신기술 창출을 위한 활동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 또는 관련 실험 진행		예 아니오
			알려진 기술, 보유한 지식을 조합하는 활동만으로 진행하지 않음		
		불확실성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완성		
			실패 위험이 내재된 활동이고, 기획단계의 예상결과물과 최종 결과물이 디자인, 기술, 기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음		
			‘기능 또는 작동이 보장된’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지 않음(양산 활동X)		
		체계성	연구원들은 자신의 직무영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연구전담 조직과 그 외 조직이 독립적으로 관리됨		
			연구노트, 보고서, 회의록 등 문서화 또는 디지털 자료화하여 보관		
			연구기획단계와 후속 연구단계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		
		재현가능성	연구개발 유·무형의 결과물이 다른 연구자 또는 회사에서 재확인, 구현 가능함		
			개발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 등록하거나 학술지 논문 게재함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	○ 다음과 같은 비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 - 일반적인 관리·지원, 시장조사, 판촉,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 조사·분석 - 특허권 신청·보호 등 관련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 조사·탐사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예 아니오

### Ⅲ. 비용검토

####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중 비용심사 주요 항목



#### 01. 인건비

##### ◎ 인건비 관련 주요 항목

- (인건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이 인건비에 포함되나, 연구전담 여부와 연구수행 자격 충족 여부, 퇴직소득 및 복리후생비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여 세액 공제 적용되는 비용에서 제외해야 함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제외함

< (조특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p>가. 자체연구개발</p> <p>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1(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2(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3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③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p> <p>*2)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관리직원"은 2016년부터 공제대상에 제외되었음에 유의)</p> </div>

1. 연구개발	<p>-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됨</p> <p>①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p> <p>②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p> <p>③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p> <p>*3)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p> <p>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p> <p>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p> <p>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p>
---------	---

### ● 인건비 인정·불인정 유형 개관(概觀)

- (인건비 인정 유형) 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전담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 (인건비)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전담연구원) 공제대상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연구만을 수행하여야 하고 ①6개월 이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②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을 수학하는 자(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 ③산업기능요원,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자 등은 전담연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 (인건비 불인정 유형) ①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연구소 소속이지만 연구소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②연구활동을 전담하지 않고 타부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③연구소·전담부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직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여도 연구를 직접 참여하지 않는 연구소 관리 직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겸직)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제외한 생산, A/S, 구매, 마케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는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인원으로 볼 수 없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연구원들의 연구 방향을 지시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등 연구원 관리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담연구원의 연구활동이라 할 수 없고 개별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연구과제의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연구를 감독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으로 분류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7.13.

- (전략)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장과 CCC원장은 각 기관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별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연구과제의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관리·감독한 것은 아니었고,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의 주제 및 방향이나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성원이 수백명에 이르는 단체의 장이라는 지위는 그 본질적인 특성상 그 기관의 본연의 업무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 등 여러 부수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정적인 관리 업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가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점, (후략)

- (등록 전 비용) 전담연구원이 연구활동만을 수행하였다 하여도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능
- (수탁연구) 수탁연구는 위탁업체의 연구를 대신 수행하는 활동으로 해당 연구와 관련한 비용은 위탁업체의 연구비용이므로 이를 수행한 연구원의 인건비 또한 공제대상이 아님(합리적 안분방법에 따라 자체연구 부분은 공제 가능함)
- (특수관계인) 전담인력으로 등록된 연구원이 ①주주인 ②임원으로서 보유주식이 10%를 초과하거나 10% 초과 보유 주주의 특수관계인일 때 세액공제 불가

● 겸직 관련 주요 정리 사항(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7.13.)

제목	내용
타업무 겸직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에게 전담연구원을 배정하여 해당 고객의 제품 상담에서부터 제품 양산 및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고객관리나 기술발전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러한 판단에 따라 연구활동과 영업활동을 적절히 결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납세자의 자유이나</li> <li>•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li> </ul>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주제 및 방향,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li> <li>- 연구소 단체의 장이라는 지위는 그 본질적인 특성상 그 기관의 본연의 업무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 등 여러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리업무는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연구과제의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연구의 내용을 감독</li> </ul> </li> </ul>
연구에 간접적 도움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 업무 가운데 고객과의 상담이나 방문, 단순한 맞춤형 제품개발의뢰나 불만 접수, 제품 수리 등의 업무는 순수한 연구개발 업무와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활동이 원고의 기술발전 및 신제품 개발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연구개발의 범주에 넣을 수 없을뿐더러 그러한 업무를 필연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법인세과-912, 2009.08.18.)</li> <li>•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 소재 모 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법인세과-1329, 2009.11.27.)</li> </ul>

### ● (인정) 인건비 사례

항목	내 용
연구활동 및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노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취득내역이 확인됨</li> <li>-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이 확인되어 전담연구원으로 근무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li> </ul>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전담연구원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li> <li>• 2019년에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포함하여 공제 적용됨</li> </ul>
전공이 무관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 A와 B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이수한 점을 확인하여 연구과제 수행 여부 판단</li> <li>- 따라서 연구원 A와 B를 해당 과제에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인정</li> </ul>
임직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li> <li>• 기업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자체 보상금 산정기준을 두고, 이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연구원과 임원 등에게 지급하고 있어 신청 보상금 전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li> </ul>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한 외부연구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으로 지출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으로 수행한 경우에 한함)</li> </ul>
정부지원 연구과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를 민간부담금 만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li> </ul>

### ● (불인정) 인건비 사례

항목	내 용
퇴직연금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연금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의 성격이 있으므로</li> <li>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세액공제 대상 불인정</li> </ul>
10% 초과 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주인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인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 불인정</li> </ul>
겸직 연구소장에 대한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소장은 수백명의 연구원들을 관리하고, 회사 관리 업무, 대외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겸직하였음</li> <li>따라서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연구소장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인정</li> </ul>
관리직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직원의 업무는 기자재 및 부품 등의 구매 등 연구개발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임</li> <li>- 전담연구원 및 연구를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자가 아닌 관리직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건비 불인정</li> </ul>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담연구원이란 해당 기업의 연구업무 외에 영업, 관리, 지원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연구원을 말하는 것으로</li> <li>연구원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시연 등 기술지원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전담연구원으로 불인정</li> </ul>
연구원이 사내이사 업무 수행함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홍보, 주요의사결정 수행, 대표이사 개인 심부름 수행 등은 비연구활동으로서 해당 활동 수행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연구 전담요원이 아니므로 인건비 불인정</li> </ul>
특수관계법인 연구활동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자인 연구의 결과물인 브랜드 등의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은 신청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에게서 발생</li> </ul>

대신함에 따른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등 개발비용은 두 법인이 같은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므로 두 법인 간 공동 경비에 해당함</li> <li>※ 공동경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배분 기준에 따른 해당 법인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li> <li>• 해당 연구소 운영비용은 신청법인에서 100% 부담하였으므로, 법인령 제48조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신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을 위하여 연구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손금 불인정 및 관련 비율만큼 세액공제 불인정</li> </ul>
연구개발 활동 확인할 수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가 공제 대상으로</li> <li>• 수습연구원은 입사 이후 3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신입교육을 받는데 할애하였고, 연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인정</li> </ul>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은 ‘해외 영업’, ‘국외 파견 근무를 통한 연구결과물의 사후관리 업무’ 등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겸직</li> <li>- 사후관리 업무의 주목적은 고객 응대, 불만 해소로 통상의 A/S업무와 다르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후관리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연구원 인건비 불인정</li> </ul>
연구개발과 식품안전관리 활동을 병행한 연구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활동과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전담연구원의 인건비 불인정</li> <li>- HACCP 인증 유지 관련 활동은 식품제조 회사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업무이고,</li> <li>- 제조 현장 및 양산제품에 대한 미생물·위생학적 관리 업무는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상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함</li> </ul>
출연금으로 지급한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과제 관련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1호·2호에 해당된다면 인건비 불인정</li> </ul>

## ◎ 인건비 관련 주요 예규 및 판례

**문서번호** 조심-2020-중-7744, 2021.11.22.

고객사에 상주하는 게스트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게스트연구원은 쟁점연구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점, 게스트연구원은 고객사에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을 하였다기보다는 고객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활동을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어렵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61777, 2021.08.27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 요 지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 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등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액공제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xx. xx.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현지 조사를 받아 기업부설연구소의 조직과 연구원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2014. xx. xx.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건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9호증, 을 제1 내지 8,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제1심 증인 신HH, 이CC과 당심 증인 신JJ의 각 일부 증언(아래에서 배척하는 각 일부 증언 부분 제외)만으로는 ‘원고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 소속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원고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신HH, 이 CC과 당심 증인 신JJ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증인들과 원고 회사와의 관계 및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확인한 원고의 본사 건물에 게시된 2017. xx. xx.자 직원 현황 및 조직도2)에는 대표이사를 업무 총괄자로 하여 그 밑에 경영지원부문, 개발영업부문, 공장이 있고, 개발영업부문에는 개발영업 1팀, 개발영업 2팀, 설계팀이, 공장에는 생산팀, 생산기술팀, 품질관리팀, 금형팀이 있었을 뿐 별도의 독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조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조직이나 업무 분장이 위 직원 현황 및 조직도 작성 이전에 크게 변동되었다고 볼 다른 자료는 없음
- ② 2011, 2012년의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그 소속 부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기술부설연구소라는 부서명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전화를 걸면 연결되는 ARS 안내멘트 상에도 개발/영업, 경영지원 등의 타 부서와 달리 기업부설연구소가 누락되어 있음
- ③ 원고가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 ㉠ 2011. xx. xx.자, 2012. xx. xx.자 및 2012. xx. xx.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에는 신JJ가 2008. xx. xx.부터, 신HH이 2010. 9. 1.부터 각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2014. xx. xx.자 및 2014. xx. xx.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에는 신HH이 2013. xx. xx.부터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한편 원고의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 및 인사명령과 같은 내부결재 자료에 의하면, 신JJ는 2011년과 2012년에 개발영업부문 소속으로, 신HH는 2012년에 금형팀 소속으로 각 상여금을 받았고, 신HH이 2011. xx. xx. 금형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xx.xx.부터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아 보직이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원고가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한 자료들과 내부결재 자료들 사이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음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2021.07.14.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 요 지

내국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20-법안-4161, 2021.05.13.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요 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 →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문서번호** 조심-2020-부-7400, 2021.03.15.

쟁점인건비가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나,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두68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2.10.선고 2010누2563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서의 조직도에 기재된 직무와 직무수행비율 등에 따르면 일부 인원이 행정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하는 인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쟁점부서를 연구전담부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2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 ○○○에 매년 변경내역을 신고하고 있고, 쟁점부서는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신제품 개발프로세스에 따라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쟁점부서의 경우에도 개발 단계별로 연구 검토항목이 지정되어 있는 등 쟁점부서는 고객사에 납품할 부품의 시제품을 개발·제작하는 부서로 양산 이전 단계에서 완성차업체의 납품조건에 맞도록 설계, 시험제작(시제품), 기술적인 시험평가 등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연구전담부서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에서 일부 인원이 행정업무등을 하였다고 하여 부서인원 전체의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보다 행정업무등에 전담하거나 일부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당 인원만을 세액공제 대상인건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24, 2021.01.2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 답변내용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72, 2021.01.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2019. 2. 12. 조세령 개정으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음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01.0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906, 2020.12.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을 추후 전액 반환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 배제한 정부출연금 중도 포기의 사유로 전액 반환한 경우 해당 지출 비용이 동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조심-2020-중-2174, 2020.11.02.

쟁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다른법인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의미함에도 청구법인 연구소 직원으로 등록된 직원 ○○○, ○○○, ○○○, ○○○, ○○○ 등은 ○○○에서 웹디자인 개발, 콘텐츠 통합, 스트리밍솔루션 개선, 웹하드솔루션 및 덕플레이어 제작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18-부-4062, 2019.06.26.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관련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조직도, 인사기록카드 및 부서별 업무내역 등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신고된 인원은 46여명이지만, 8개팀 중 연구개발 관련 팀은 한 팀(기술개발팀)에 불과하여 그 인원 전부가 기술개발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대부분 직원들의 발령부서가 연구개발팀이 아닌 설계부서로 확인되는 점, 그 설계부서의 업무내역이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배 등의 설계, 배치 및 설계관리 등에 해당하고 수주실적상으로도 업무범위가 주로 ○○○, ○○○ 등의 건조, 실시설계 및 시운전 등의 중심으로 발주되어 연구개발 위주의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설계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 신고 시 기술연구소 연구직원들의 활동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조특법령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산물자의 연구활동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방산물

자가 부득이하게 위탁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인건비가 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문서번호

심사-법인-2018-0015, 2018.08.31.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 요 지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증명이 부족한 점, 오히려 B이 대학교의 인터넷 사이트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글을 올린 사실에 비추어 보면 B이 마케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협회에 보고한 2015 사업연도 '연구개발 활동조사표'에 연구보조원의 평균 연구참여 비율이 20%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함

문서번호

조심-2018-중-0635, 2018.06.08.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요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는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에 사외의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지출되고 그 지출시마다 그 지출분 상당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처리되며 과세연도별 및 대상 근로자별로 그 지출액을 특정할 수 있는 점, 2013.1.1. 「소득세법」 개정은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의 수혜자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던 것이 과세 제외 대상으로 변경된 것일 뿐 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 것인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인건비의 범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16-서-3647, 2018.04.0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정함

#### ♣ 요 지

청구법인은 ○○○에 소재하였던 것에 반하여, 쟁점연구소의 소재지는 원격지인 ○○○에 위치하고 있는 점, 쟁점연구소의 내·외부를 찍은 사진들에 의하면 쟁점연구소는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가건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4.10.24. ○○○에 신고한 쟁점연구소의 연구시설 현황 상 2004년 설치된 보조원 컴퓨터와 노트북 그리고 연구용 서버 각 1대, 2009년 설치된 노트북 1대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될 뿐이므로, 쟁점 연구소에서 연구소장 ○○○ 외 연구원 5명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물적요건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6.4.22.자 경정청구서에 기재한 쟁점연구소의 연구원들 목록이 2014.10.24. ○○○에 최종적으로 제출한 연구원들의 목록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두 목록에 기재된 연구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연구소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연구소에 비치된 책상이 5개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2014.10.24. 쟁점연구소에 전담연구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에서 사용된 카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카드를 사용한 내역만으로는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을 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 또는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연구원들이 쟁점연구소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로 거소를 이전하였다거나 거주지에서 쟁점연구소로 출퇴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477, 2017.12.08.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 요 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법규과-01017, 2014.9.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나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조심-2017-서-2707, 2017.10.17.

쟁점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세액공제를 부인한 연구원의 쟁점인건비 상당액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조직도, 구내 전화번호부, 조직구성도 및 근태부에 의해 연구개발 업무부서 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건비이며, 이들이 실제 기안한 품의서 등에서도 영업부와 관리부 등 연구소 외의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연구원들이 연구업무에 전담하였다는 청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전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16-서-3836, 2017.06.29.

전담연구원이 아닌 겸직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요 지

청구법인은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아닌 반도체 설계 및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 점, 쟁점직원들은 설계팀, TEST 기술팀, 품질관리팀,

Application팀 등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들인 점, 반도체 개발은 회로 설계, 레이아웃(mask) 설계,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검증, 신뢰성 평가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가 수행되는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와도 피드백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큼의 구체적인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직원 중 2~3명은 겸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팀별·개인별 업무 성격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쟁점직원들이 겸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6]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은 자체연구개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반도체 개발과정은 최초 회로설계부터 최종적으로 신뢰성 평가에 의한 제품생산까지 샘플제작 등의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지출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한 비용 및 미신청한 자체개발 연구개발비용은 실제Mask 제작비, 실험용 자재 구입비, 시제품(Sample) 외주비용, 테스트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음이 전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공동연구개발 관련 비용 및 미신청한 자체연구 관련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문서번호

조심-2016-서-3201, 2016.10.28.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들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직원·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도 및 인사서류 뿐만 아니라 경비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직원들이 타부서 소속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이 있었고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을 전담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15-중-2163, 2016.10.06.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사업부의 연구소를 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 요 지

○○○ 내 연구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연구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소로 규정하고 있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업무를 ○○○에 위탁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후 지속적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음에도 취소된 사실이 없다면, 연구소의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기술개발촉진법령상 연구소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다 하여 동 연구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처분청은 조직도상 연구소가 일정기간 존재하지 않았거나 3인 또는 5인 이상의 인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연구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직도에 불구하고 실제 연구소가 존재하는지, 사업연도 중 입사한 직원이나 ○○○에 이미 신고된 연구원들을 인력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촉진법령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후 수 차례의 변경신고가 수리된 ○○○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문서번호 조심-2015-중-4344, 2015.11.16.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에 출장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 1층에는 1명의 사무원 외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연구시설 및 연구 관련 자료·서류·문구·비품 등이 없으며, 연구원으로 등재된 직원들은 모두 2층 사무실의 설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된 ○○○부장은 2013년에는 연구실적이 없어 보고서 등 연구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설령, ○○○작성한 2013년도 연구진행개요보고서를 인정하여 2013년에 연구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2013년 중 실제 연구기간은 52일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2013.4.15. ○○○가 취소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15-부-3732, 2015.11.02.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은 2010.1.21. 사무실과는 구분된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한국산업진흥협회장 인정)하여 연구전담요원 2명(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배치하고 자동차시트 설계 관련 연구개발 및 직원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자동차시트 설계 관련 연구성과 목록과 그에 대한 증빙(동영상 등)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조특법 제9조제5항에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인력개발은 임원이나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연구전담요원들이 수행하는 기존설계에 대한 기술개선과 새로운 설계방법 연구 및 설계업무 종사직원에게 대한 교육활동은 조특령상 연구인력개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구전담요원들이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15-전-1070, 2015.05.19.

쟁점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연구원이 연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연구소는 2006.5.3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바 있으나 동 협회에 쟁점연구원을 연구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시한 쟁점연구소의 구성내역 및 팀별 주요업무(2012. 1.1. 기준)에서 쟁점연구원이 속한 Project Management팀의 주요업무에 연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 및 본사 업무 대응’이 포함되어 있고, 동 업무는 ○○○ 소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쟁점연구원의 업무 중 일부로 보이므로 쟁점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52, 2014.07.17.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3호너 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5635, 2011.02.10.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 요 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전담부서의 지원인력의 경우에도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해보면,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지원인력이라도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인건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는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의 연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연구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과세대상인 인건비가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682, 2014.05.02.

이종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은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별표 6] 제1호 가목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 하나로 자체기술개발의 경우 ‘전담부서(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 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 871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어떤 회사가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원이 당해 회사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회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 위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연구요원을 고용하여 자체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한 회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이 실제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였고,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문서번호

법인세과-912, 2009.08.18.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재조예46070-202, 2000.05.31.

연구전담요원으로 등재안된 주주임원인 기업부설연구소소장의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가목 ①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주주"인 연구요원 등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것임

● 인건비 체크리스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인건비) >

사업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여부
인건비	물 적 요 건	독립된 공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	• 연구원들이 전담부서등에서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수행할 것		<div>예</div> <div>아니오</div>
	검 직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연구원은 연구 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 연구업무 전담연구원이 연구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업무(행정, 홍보, 품질관리 등)를 수행하지 않을 것 • 전담부서 등의 지원인력은 연구요원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 연구보조 공제O, 연구관리 공제X		<div>예</div> <div>아니오</div>

인 건 비	공 제 대 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리후생비 등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비용은 인건비에서 제외할 것</li> <li>•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제외할 것</li> </ul>	예 아니오
	주 주 임 원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법인의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 소유하는 자</li> <li>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 소유하게 되는 자</li> <li>3. 2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단,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인 경우는 제외</li> </ol> </li> </ul>	예 아니오

## 02. 재료비

### ◎ 재료비 관련 주요 항목

- (재료비 등)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등 적정 여부 확인
    -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시험용 비품인 실험기구 및 장치 등 고정자산 구입비 등은 제외
  - 연구개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 제조·양산 여부와 더불어
    - 연구개발 활동이 부적격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미한 재료비 등 포함 여부 확인
- \*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 (조특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p>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p> <p>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 25조의3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연구시험 장비 및 시설의 임차비용은 포함되나 건물임차비와 공구 등 취득비용은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p> <p>*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제외(통칙 9-8...1)</p> <p>*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 하더라도 컴퓨터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p> </div>
--	---

### ● 재료비 등 인정·불인정 유형 개관(概觀)

- (재료비 인정 유형)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① 시제품제작비, ② 기초실험재료비, ③ 인증·평가 시험비, ④ 기술자문료 ⑤ 특허조사·분석비 ⑥ 민간 부담금 등이 해당됨
  - (시제품제작비) 시제품제작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부품(시중품) 구입비, 외주가공비, 용역비, 견본품 구입비를 포함
  - (기초실험재료비) 연구개발의 기초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기초실험을 위한 시약, 원재료비, 부품 구입비를 포함
  - (인증·평가 시험비 및 기술자문료 등) 인증비, 시험평가비, 실험 장비 임차비\*, 기술자문료\*\*를 포함
    - \* 시험용 시설의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불인정. 특히, 기술자문료는 산업기술에 관한 기술자문이어야 하며, 이외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자문료는 해당하지 않음.
    - \*\* 특허권사용료(또는 기술료)를 세액공제 인정되는 '기술자문료' 등과 혼동하거나 법령개정 이전의 (구)판례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경우로 알고 있어 주의 필요하고('04년 세법개정 삭제). 기술자문계약서 또는 결과물 등을 통해 기술자문료 확인 필요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

■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 ①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재산

- (특허조사·분석 비용)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 (2021.1.1. 시행)

- \*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등록/변경/삭제 현황이 게시되므로, 공시/공고된 진단기관 게시물 검색 후 확인

- (재료비 불인정 유형) 연구개발 활동이 부적합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재료비가 불인정되며,
  - 불인정 유형으로 ① 비연구개발 활동비, ② 양산제품 제작비용, ③ 기자재비, ④ 일반경비, ⑤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비, ⑥ 일반적인 품질관리비, ⑦ (정부)출연금, ⑧ 증빙자료 미제출 등이 있음
  - (비연구개발 활동비) 기술검토 결과 부적격 판정에 따른 재료비 일체가 불인정되거나, 과제 연관성이 없는 지출 비용
  - (양산제품 제작비용) 연구개발 활동 이후 양산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양산을 위한 원재료비, 부품비, 제품 금형비, 설비, 지그(Jig),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제작비
  - (기자재비) 실험 장비·장치\*, 일반 공구, 소모품, 비품, 범용(상용)S/W\*\*, License, 업무용 PC 구입비

\* 기계장치·분석설비 등 시설장치 구입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한글, 리눅스, CAD(설계프로그램) 등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특정 자동화 설비 등에 같이 사용되는 운용 S/W는 자동화 설비의 운용에 따라 함께 감가상각하므로 [별표6]의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소프트웨어(S/W) 관련 재료비 정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
- \*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그 외 일반경비 등)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비, 일반적인 품질관리비, 출연금\*, 홍보비, 교통비, 월 회비, 통신비, 특허 등록·유지 행정비용, 기술이전료, 품질인증비, 검교정비(檢較正費) 외 그 외 일반경비

\* 특허, (정부)출연금 중 민간부담금에 해당하지는 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R&D의 시설 임차료) 일반연구개발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를 공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신성장·원천기술(제9조제3항)과 국가전략기술(제9조제7항)의 공제대상 항목에서 제외되어, 해당 시설 임차료에 대해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구분 적용 해야함

#### < 재료비 인정·불인정 분류표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정	시제품제작비	시제품 제작 원재료비, 시제품 제작 시중품 구입비, 시제품 제작 가공비, 시제품 제작 외주가공비(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금형비, 견본품 구입비
	기초실험재료비	기초실험 원재료비, 임상실험 원재료비

	평가 시험비	시험평가비, 실험장비 임차비용,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운반(설치) 비용
	기술자문료	기술자문료(대학, 산학협력단, 공인연구기관)
	특허조사·분석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사목에 의해 지출한 특허 조사·분석비
	인정 기타	기타 (예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에 지출한 민간부담금)
불인정	비연구개발 활동비	기술검토 결과 부적격 판정에 따른 재료비 일체, 과제연관성이 없는 지출 비용
	양산제품 제작비	양산 제품 금형·Mask비, 양산 설비, 양산 설비에 투입된 지그(Jig), 양산 원재료비(자가소비 포함), 납품용으로 전환된 시제품재료비
	기자재비	실험장비/장치, 일반공구, 비품, 범용S/W 구입비, License비, 업무용 PC
	일반경비	마케팅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팜플렛·카달로그 제작 비용, 학회참가비, 출장비, 교통비, 학회월회비, 도서구입비, 통신비, 건물임차료, 관리비
	지식재산권 비용	특허·실용실안·디자인등록 수수료, 기타 특허사무소 행정처리 비용, 기술이전료
	일반품질비용	납품요건 충족 등 일상적인 품질인증(실험)비, 측정장비 검교정비
	출연금	인정 재료비에 해당하나 정부기관(지자체) 지원이 확인된 비용, 민간 부담금에 해당하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 연구용 자산에 대한 현물성 민간부담금
	불인정 기타	증빙 자료가 없는 재료비 등

● (인정·불인정) 재료비 등 관련 비용심사 사례

항목	내 용
정부지원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당사가 부담한 민간부담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한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li> <li>※ 자산을 현물성 민간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li> </ul>
목업(mock-up)비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업 테스트(Mock-up Test)란 디자인 등 연구 개발한 제품이 실제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목업을 만들어 제품의 실사용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제품생산 전에 한해서만 사용되고 폐기되는 시제품으로 공제 가능함</li> </ul>
연구용 금형제작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 인정</li> <li>- 양산용이 아닌 연구용 금형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공정 및 금형설계 활동과 연구용 금형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활동 등의 자료를 제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 금형들은 별도의 공간에 제작·보관되고, 시제품은 시험용으로 일정 수량만 생산하는 등의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됨</li> <li>- 연구소는 금형 이상 여부 확인하고 금형 생산 시점에 따라 시제품 샘플링 하여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소명함</li> </ul>
건강시스템 실험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중인 건강시스템의 효과 테스트를 위해 참여자 모집 및 모집된 참여자의 건강을 측정하고 지급한 비용을 재료비로 신청</li> <li>• 연구개발 과정에서 의료 목적 임상 수준은 아니지만, 업종 특성상 불특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효과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 참여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과제 관련 서비스 개발과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테스트 비용으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li> </ul>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사육 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시험이 필요한 수탁연구사업과 치료제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체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된 동물의 사료비를 재료비로 신청</li> <li>• 동물실험이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이 아닌 미리 구입하여 사육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자체연구개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활동에도 동물이 사용될 수 있기에,</li> <li>• 사용 용도에 따라 별도로 구분된 동물관리 대장 및 소요된 비용 명세 등 근거자료를 통해 연구용으로 사용된 비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li> </ul>
연구소등록 前 연구 관련비용의 공제 여부(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를 등록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실질적인 연구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불인정</li> </ul>
시제품을 영리 목적으로판매한 경우 해당 재료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단계에서 제작한 시제품일지라도 영리 목적으로 시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시제품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불인정</li> </ul>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 지출 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공제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음</li> <li>※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등</li> </ul>
연구 비품 구매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비 중 비품(실험대, 실험실 책상, 사무용품, 공구류 등) 구매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불인정</li> <li>※ 기초실험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류(예-일회용 장갑, 일회용 원심분리튜브 등)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li> </ul>
특허실시권 설정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실시권은 타인의 특허를 대여하는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열거된 항목이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li> </ul>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에게 서비스하기 위한(예- 게임, 자료저장 등) 클라우드 임차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에 해당하므로 불인정</li> <li>※ 클라우드 서비스는 SaaS, PaaS, IaaS로 나눌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를</li> </ul>

	<p>위한 클라우드 비용은 연구개발 비용에 해당 안 됨</p> <p>※ 목표(예- 신약 물질 개발, 지표개발 등) 달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데이터 축적 및 축적된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비용인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가능</p>
전시·홍보 목적 시제품에 대한 재료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홍보 목적을 가지고 시범농장에 무상 설치 및 가동하기 위해 개발 완료된 건조장치의 제작비용 불인정</li> <l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자체개발하는 비용이 연구용일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li> </ul>
미판매된 제품(재고자산)과 관련된 재료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완료 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제작된 시제품을 판매용으로 전환하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비용은 불인정</li> <li>- 판매되지 않았다고 해도 기업은 완제품으로 보아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li> </ul>
해외 송금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해외 송금수수료는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불인정</li> </ul>

### ◎ 재료비 등 관련 주요 예규 및 판례

문서번호 조심-2021-서-5419, 2022.08.23.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Mask를 개발하여 성공한 후 이를 양산단계에 활용하면서 관련Mask 개발 비용을 자산화(공구와 기구)한 경우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요 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화한 쟁점 ○○○는 양산과정에 투입되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R&D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Mask의 개발비용을 회계상 자산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하더라도, R&D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점(법인세과-1859, 2008.8.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반도체 개발과정은 최초 회로설계부터 최종적으로 신뢰성 평가에 의한 제품생산까지 시제품 제작 등의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바, Mask 제작은 반도체 시제품 제작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개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서 R&D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6서3836, 2017.6.29., 조심 2018구2633, 2019.6.26., 같은 뜻임), 개발 실패한 ○○○ 개발비용과 개발 성공한 ○○○ 개발비용은 모두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동일한



위험을 안고 투자된 것임에도 그 중 개발에 실패한 ○○○ 개발비용만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개발에 성공한 ○○○개발비용은 이를 제외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조심-2021-전-3114, 2021.12.27.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상 및 무상의 취득은 취득시점에서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이를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는 유·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및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상 취득분과 무상 취득분이 사용 및 지출시점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전1124, 2021.10.27., 같은 뜻임)

문서번호

조심-2021-전-1124, 2021.10.27.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쟁점원재료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2014사업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

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개정되었는데, 유상 및 무상의 취득은 취득시점에서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이를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는 유·무상 취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용 및 지출에 해당하는 것인 점,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R&D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민간으로부터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R&D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하는 시점에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R&D세액공제 대상으로 사용 및 지출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는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상 취득분과 무상 취득분이 사용 및 지출시점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에 대하여 R&D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문서번호

조심-2018-부-4066, 2021.06.21.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여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 건조비용 전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5항이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을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등의 구입비를 세액공제 대상비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는 점에 비추어 불 때 위 조항의 ‘연구개발’ 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쟁점구매계약서상 제목이 ‘물품구매계약’ 으로 되어 있고 계약의 목적이 쟁점호위함을 상세설계 및 건조하여 ○○○에 인도한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합정들의 건조과정에서 일부 연구개발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과정 전부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품의 제작 후 용도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견본품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별표6】의 문리해석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견본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시제품이어야 하고 쟁점합정들과 같이 납품을 목적으로 건조된 경우에는 이를 견본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음(대법원 2014.3.13. 선고2013두22147 판결, 같은 뜻임)을 고려하면 ○○○이 제시하는 기술요구조건에 맞추어 일반경비가 포함된 쟁점건조비용 전부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합정들이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을 연구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245, 2021.03.24.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포함)부터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81, 2019.10.17.

견본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 ♣ 요 지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견본품의 해당여부는 연구개발 과정, 공급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물품구매(제작, 시제)계약에 따라 제작한 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세액공제 대상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본품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제조원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제조원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

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건본품의 제조원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건본품의 제조원가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31, 2018.06.20.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한 선도함이 R&D세액공제 대상 건본품인지 여부

**♣ 요 지**

내국법인이 방위사업청과의 선박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제작한 선도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건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의 건본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05, 2017.07.13.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요 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각종 연구기관, 기업이나 단체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 의한 연구개발을 장려할 목적에서 그 대가로 지급되는 일정 범위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앞서 살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으로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하고, 재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 기자재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어야 함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2017.01.11.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 요 지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제품 제작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828, 2011.10.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28, 2011.10.30.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제1항 관련) 제1호 가목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 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02, 2016.02.05.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 요 지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1.연구개발란 가목(자체연구개발)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구입비는 이미 개발되어 기존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지 또는 범용성 있는 부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24, 2018.01.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무발명보상금 여부

♣ 요 지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의 1.연구개발 라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보상형태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678, 2017.09.04.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 요 지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주주인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인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행위가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해당 주주인 임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지, 법인에게 이익이 발생하여 그 일부를 보상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2015.10.06.

임원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재료비 등 체크리스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재료비) >

사업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요건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재료비	견본품 등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div>예</div> <div>아니오</div>

	사용하기 위하여 견본품, 부품 등을 구입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②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li><li>•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는 포함하지 않을 것(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9-8-1①(3))</li><li>• 자체 제작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포함(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2017.1.11.)</li></ul>			
연구· 시험 용 시설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 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용<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임차<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li><li>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li></ul></li><li>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li></ul></li><li>• 실험기구 및 장치 등 고정자산의 구입비용은 제외(법인22601-1447,1986.5.6.)</li><li>• 건물임차비용 제외(법인22601-771, 1990.4.2.)</li></ul>	<table><tr><td>예</td></tr><tr><td>아니오</td></tr></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03.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정·불인정 유형 개관(概觀)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인정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포함)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불인정 유형) ①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판매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② 기업부설 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없는 기업에 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RP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위탁한 비용으로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 (수탁업체 연구소등록) 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전담부서나 연구소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위탁연구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함

< (조특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비 용
1. 연구 개발	<p>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p> <p>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 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p> <p>나) 국공립연구기관</p> <p>다) 정부출연연구기관</p> <p>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p> <p>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p> <p>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p> <p>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p>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p> <p>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p> <p>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p> <p>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p>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p> <p>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p> <p>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p> <p>⑤ 영 별표 6의 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담부서등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li> <li>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li> <li>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li> </ol> </div>



1. 연구개발	<p>가. 영 별표 4의 산업</p> <p>나. 광업</p> <p>다. 건설업</p> <p>라.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p> <p>마. 영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p> <p>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 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 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 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 운 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p> <p>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연구산업</p> <p>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p> <p>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p> <p>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p> <p>사.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p>
---------	--

● (인정·불인정)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사례

항목	내 용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위탁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수탁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실제 신기술개발 관련 용역을 의뢰하고 위탁개발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위탁개발비에 해당하여 인정</li> </ul>
그룹 내 계열사 공동 연구개발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법인의 연구소는 계열사들의 공동연구만을 수행하고 있고, 위탁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거래가격이나 감정가액 등의 원칙적인 시가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세법에 따라 용역매출액 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함</li> </ul> <p>* 일반적인 거래가격 → 감정가액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법인령 제89조)</p>

	<p><b>**</b> <math>\text{용역제공원가(직접비+간접비)} \times (1 + (\text{매출액} - \text{용역원가}) / \text{용역원가})</ma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한 인건비, 재료비, 간접비 등 발생원가에 일정마진을 가산한 세법상 적정시가 내에서 공동위탁개발비를 산정하였으며,</li> <li>• 해당 금액에 대해 각 계열사별 전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는 공제대상이므로 인정</li> </ul>
전담부서가 아닌 기관에 대한 위탁개발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등록된 자에 대한 위탁개발비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수탁법인은 전담부서 등을 등록하지 않은 법인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 불가능</li> </ul>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중 위탁연구개발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법인이 위탁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연구결과로 발생하는 발명, 디자인, 노하우 등)가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이나,</li> <li>• 이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이 수탁법인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이 동 연구성과를 수정·변경하기 위해서는 수탁법인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바,</li> <li>• 해당 법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고유디자인개발을 위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적인 납품계약에 따른 것으로 공제 불인정</li> </ul>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li> <li>• 따라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자체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li> </ul>

##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관련 주요 예규 및 판례

문서번호

조심-2021-중-1765, 2021.11.23.

쟁점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 요 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가 정하는 모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결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하나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에 한하는 것이고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구입하는 비용은 포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AA 간 연구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AA에 플라즈마 CVD 장비의 개발을 의뢰하면서 연구개발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개발도면 및 부속 프로그램은 AAA의 소유로 하되, 청구법인은 개발된 장비를 한시적으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기로 한바, 청구법인이 AAA에 쟁점비용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AAA이 개발·생산한 장비를 한시적으로 독점취득하기 위해 AAA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이 AAA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1064, 2018.05.31.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177, 2017.2.9.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로 상품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365, 2018.02.2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의 안분계산

♣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

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2015-법인-2530, 2017.05.11.**

Mask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내국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반도체칩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Mask"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도체칩 생산에 사용되는 최종 'Mask'의 외주가공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문서번호****조심-2014-서-4632, 2016.02.25.**

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요 지**

청구법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Mock-Up Test를 위해 전문검사업체에 위탁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환급되었고, 시험체는 시험 후 시험과정에서 파손·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계약상 전문검사업체의 자산이 되어 사외로 완전히 유출되는 점, Mock-Up Test를 위해서는 시험체 제작이 필수적이고, 계약상 청구법인이 제작하여야 하는 점과 조특법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취지(동일한 기술 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설비투자는 자산의 대체성, 잔존가액의 존재 등의 특성이 있는 반면 기술개발비용은 지출과 동시에 사외로 완전히 유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설비투자보다 위험내재요인이 더욱 많을 수 있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 제도임) 등에 비추어, 시험체 제작을 위한 비용인 쟁점재료비는 별표6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음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65, 2015.07.22.

회사 부담으로 국외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조약등 구입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요 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국외 임상시험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내국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연구용 바이오시밀러의 자체 생산비용 또는 대조약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 요 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조심-2014-서-2789, 2015.04.06.

청구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요 지

별표 6 제1호 나목 ①의 규정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위탁업체의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전 별표 6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

한 청구법인과 같은 수법자로서는 그 세액공제 여부가 재위탁 여부 또는 재수탁자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있는 점(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두31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이 위탁한 차세대시스템 및 소액지급결제시스템 개발용역은 융합기술개발이 필요하여 단일 기업의 인력 및 기술에 의존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기업에 그 일부를 재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도 효율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별표6의 문언대로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 용역을 위탁한 이상, 재위탁이 이루어졌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에 따른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 2015.02.26.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 ♣ 요 지

내국법인이 의약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자체 제작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의 제조가공비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효 및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조약의 구입비용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또는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체크리스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기타) >

사업연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요건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위탁·공동	연구개발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하였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일 것(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li> </ul> </li> </ul>	예 아니오	

동 연 구 개 발	용 역	것	<div>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맞춤형 제작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div> <table><tr><td>구분</td><td>자체 R&amp;D</td><td>위탁 R&amp;D</td><td>재위탁 R&amp;D</td><td>공동 R&amp;D</td></tr><tr><td>일반R&amp;D</td><td>○</td><td>○</td><td>○</td><td>○</td></tr><tr><td>신성장R&amp;D</td><td>○</td><td>△*</td><td>△*</td><td>△*</td></tr><tr><td>서비스R&amp;D</td><td>○</td><td>△*</td><td>△*</td><td>△*</td></tr></table> <div>* 국외기업 전담부서 위탁(○), 단, 신성장 R&amp;D(X) - 신약임상 비용(1-3상)은 해외위탁 공제 * 서비스R&amp;D는 자체R&amp;D 한정하여 인정(과학기술 분야 결합된 서비스 R&amp;D의 경우 위탁·공동 연구개발도 인정)</div>	구분	자체 R&D	위탁 R&D	재위탁 R&D	공동 R&D	일반R&D	○	○	○	○	신성장R&D	○	△*	△*	△*	서비스R&D	○	△*	△*	△*	
	구분	자체 R&D	위탁 R&D	재위탁 R&D	공동 R&D																			
	일반R&D	○	○	○	○																			
신성장R&D	○	△*	△*	△*																				
서비스R&D	○	△*	△*	△*																				
위탁· 공동 연구 기업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 야의 연구개발 용역을 「조세 특례제한법시 행령」 별표6.1. 나.1)에 해당하 는 기관에 위 탁(재위탁 포 함)할 것	<div>• 다음의 기관에게 위탁(재위탁 포함) 또는 공동연 구 개발함에 따른 비용일 것 - 대학,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 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연구기관 - 전담부서등(직접 수행한 부분 한정)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 연구개발서비스업 영위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 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받아 수행하는 국외 소재 기업 - 산학협력단,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한국디자인진 흥원 등)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조교수 이상인 자 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것</div>	<table><tr><td>예</td></tr><tr><td>아니오</td></tr></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 타	정부 출연금	정부출연금 등 으로 지급한 연구 개발비 등 제외	<div>•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의 비용은 연구개발비에서 제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 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 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div>	<table><tr><td>예</td></tr><tr><td>아니오</td></tr></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04. 인력개발비

### ◎ 인력개발비 인정·불인정 유형 개관(概觀)

- (인력개발비 인정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인력개발비 불인정 유형)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중 공제 제외하는 금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용 중 24시간 미만인 활동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는 5년형으로 정부지원없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기업이 납부한 금액이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만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비용과 ②5년 이내 중도해지를 사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공제 금액에서 제외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20년 일몰) 두 종류로 중소기업의 기여금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계약서상 신청기업의 기여금이 존재하더라도 신청기업에서 납부 않음. 그러나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 납입해야 함. 정부지원금으로 기여금을 지출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기업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 (조특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비 용
2. 인력개발	<p>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li> <li>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li> <li>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li> <li>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li> <li>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sup>*5</sup></li> </o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b></p> <p>⑧ 영 별표 6 제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li> <li>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li> </ol> </div> <p>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sup>*6</sup></p>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⑨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2012.2.28>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sup>7)</sup>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6.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경비 및 경영수준 진단·컨설팅 비용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sup>\*8</sup>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⑪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 본부예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나.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다. 삭제 <2010.4.20>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안전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sup>\*9</sup>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sup>\*10</sup>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⑫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⑬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11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⑱ 영 별표 6의 제2호사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 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
  -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 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 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12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

	<p>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b></p> <p>⑰ 영 별표 6 제2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 등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교 등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이하 이 조에서 "표준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설치할 것</li> <li>2. 현장실습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대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실시할 것</li> <li>3. 표준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의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이 포함될 것</li> </ol> </div> <p>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p>
--	---

### ◎ (인정·불인정) 인력개발비 사례

항목	내 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정기검사 위탁비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라목(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항)의 범위에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위탁비용 인정</li> </ul>
퇴사하여 환급받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불인정- 세액공제 대상금액 = 불입금(납입비용) -환급받은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li> </ul>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납입액(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해지하여 법인이 환급받은 금액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li> </ul> </li> <li>• 직원 갑은 실제 회사에서 근무하고 내일채움공제 또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대표 을과 특수관계이므로 갑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 납입액은 인력개발비로 불인정</li> </ul>

직업훈련 교육 고등학교 재학생에 관한 비용(불인정, 19.12.31.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사전 취업협약 후 재학생에게 훈련기간 동안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li> <li>- 이는 2020년 2월 개정반영된 사항으로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6항)하여 그 전까지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li> </ul>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용(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위탁훈련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인력개발.가목에 열거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항목 중 전담부서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위탁교육훈련비이므로</li> <li>-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부분은 공제 불가하여 불인정</li> <li>※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2. 인력개발. 나-아목의 인력개발비는 연구전담 요원을 공제 요건으로 한정하지 않음</li> </ul>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미만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협회 등 지정된 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비용은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에 한하여 공제대상으로 인정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1항)</li> </ul>

## ●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사례

### [사례1] 공제가입 핵심인력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A는 자사의 직원 2명(국세, 세종)을 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각각 월 50만원씩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중소기업 A의 '2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납입비용은?

핵심인력	2023년
국세(일반직원)	600만원
세종(대표이사의 배우자)	600만원
합계	1,200만원

☞ '23년도 기업부담 총 기여금인 1,200만원 중 세종에게 지급한 600만원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600만원만 납입비용에 해당함

### [사례2] 핵심인력이 중도해지할 경우

근로자 3명(국세, 세종, 채움)에 대해 기업기여금으로 월 25만원을 미납 없이 납입하였음

1년차	근로자 국세(월 25만원)	300만원	총 900만원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채움(월 25만원)	300만원	

2년차	근로자 국세(월 25만원)	300만원	총 750만원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채움(월 25만원)	150만원	

☞ 근로자 채움이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 2년차 인력개발비 해당 납입비용은?

750만원 - 450만원 = 300만원

☞ 세액공제는 해당연도 총 발생액 기준(25%) 또는 전년대비 증가 발생액 기준(50%) 선택 가능

\* (750만원 - 450만원) × 25% = 75만원 (단, 세액보다 해지환급금 많을시)

### [사례3] 세액공제 대상 금액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은 경우

근로자 3명(국세, 세종, 채움) 중 국세가 3년차에 납입하고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총 납입금 900만원), 3년차의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1년차	근로자 국세(월 30만원)	360만원	총 360만원
2년차	근로자 국세(월 30만원)	360만원	총 960만원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채움(월 25만원)	300만원	
3년차	근로자 국세(월 30만원)	180만원(중도해지)	총 780만원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채움(월 25만원)	300만원	
4년차	근로자 국세	납입금 없음	총 600만원
	근로자 세종(월 25만원)	300만원	
	근로자 채움(월 25만원)	300만원	

☞ (780만원 - 900만원) = 0원으로 납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없음

→ 미차감 금액 120만원 발생

\* 세액공제 없음 (이전과세연도에 빠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포함)

### [사례4] 미차감 금액이 존재하나 다음 해 공제가입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 국세가 3년차 중도해지 하였을 경우(미차감금액 120만원), 4년차의 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납입비용은?

☞ 600만원 - 120만원(미차감금액) = 480만원

☞ 세액공제 (600만원 - 120만원) × 25% = 120만원

사례3과 사례4는 당해연도 세액공제 납입금액이 적을 시(3년차 세무조정 필요없음)에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한 납입비용(4년차 세액공제 반영)에서 차감

## ◎ 인력개발비 및 기타 항목 관련 주요 예규 및 법원 판례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07.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 ♣ 요 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 2018.11.14.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 ♣ 요 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력개발비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 조심-2017-서-3717, 2018.03.02.

쟁점교육훈련비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청구법인은 당해 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건의 쟁점위탁교육대상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라 각 대리점의 영업사원이고 교육내용이 신기술 보다는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으로 보이는 점, 1996.12.31.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라목에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취지를 볼 때 제1호는 기술지도, 제2호 내지 제4호는 인력개발로 보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제1호의 내용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신기술 교육이 아닌 판매촉진 또는 홍보 성격의 쟁점교육훈련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문언을 유추 또는 확장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교육훈련비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554, 2015.09.23.

사내교육과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 요 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 해당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74, 2015.07.23.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인력개발비 체크리스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체크리스트(인력개발비) >

구분	요건		검토사항	적합여부
인력개발비	위탁 훈련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에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 교육훈련비</li> <li>2.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전자교육 포함)</li> <li>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리·인사 등 관리 부분 자체·위탁교육비 제외(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li> </ul> </li> </ol> </li> </ul>	<div>예</div> <div>아니오</div>
	직업 개발 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9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li> <li>2.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li> <li>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li> <li>4.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등</li> </ol> </li> </ul>	<div>예</div> <div>아니오</div>
	인력 개발 기술 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도요원의 인건비, 실습재료비, 훈련시설의 임차비용</li> <li>2.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내일채움공제 납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 안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2항 각 호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5년 이내에 중도해지로 환급받은 금액</li> </ul> </li> <li>3.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li> </ol> </li> </ul>	<div>예</div> <div>아니오</div>
	생산 성 향 상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의 대상중 하나에 해당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관리·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비로서 교육훈련용교재비, 강의료 등</li> <li>2.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기관에의 위탁훈련비(한국생</li> </ol> </li> </ul>	<div>예</div> <div>아니오</div>

			산성본부 위탁훈련비 제외) 3. 한국콘텐츠진흥원에의 위탁교육비용 4.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 훈련비용 5. 해외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사내 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의 운영비	• 공제가능: 교육훈련용 교재비·실험실습비, 강의료, 실험실습용 물품시설 임차비, 교육훈련생에게 지급한 수당 및 식비	<table><tr><td>예</td></tr><tr><td>아니오</td></tr></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맞춤형 고교 운영 등	특정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	• ‘특정학교’란 아래의 고등학교를 말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table><tr><td>예</td></tr><tr><td>아니오</td></tr></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 후,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	•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 및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 계약으로써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 나.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 다.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것	<table><tr><td>예</td></tr><tr><td>아니오</td></tr></table>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는 당일기준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

## 주요 내용

- '24.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9:00~15:30 에서 9:00~다음날 2:00 로 연장\*됨에 따라
  -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은 '24.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가 및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23.2월, 11월)
  - 국제적 정합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일) 24:00~2:00 외환거래를 당일(T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결산일의 회계처리 및 결산일이 아닌 평일의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 데이(Calendar day, 역일(曆日)) 기준으로 계산
- (향후계획)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및 다음날 새벽 외환거래의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추진 예정

### 1. 검토배경: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시 규제 불확실성 존재

- 외환당국(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4년 7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하면서
  - 거래연속성 및 거래상대방 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은행간시장에서의 당일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거래를 당일(T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이 캘린더데이를 기준으로 다음날(T+1일)인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도
  - 당일(T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는 기준이 없어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시간 기준을 마련하였음

## 2. 다음날 새벽에 발생한 외환거래의 회계처리기준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이후까지 연장되더라도,
  - 은행 등이 다음날 영업개시 전 일정시점을 마감시간으로 정하면, 마감시간 이전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또한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 3. 후속 조치 및 기대 효과

- 그간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기준 적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마련한 상기 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는 '24.2.22.(목)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였음
  - 향후 금융감독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회계처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 세부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 및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

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 및 외환시장 참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임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돌려드립니다

- 국세청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3. 31. → 3. 19. (12일) (개별환급) 4. 11. → 3. 29. (13일)

□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1.(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②연말정산본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③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④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 22.(금)까지 신청 시 3. 29.(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작년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 원의 환급이 발생하여 1인당 77만 원의 환급금을 순조롭게 지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

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습니다.

## 1.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앞당겨 3월 내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지급 일정	
	종전	단축
일괄 환급 (기한 내 환급신청자 중 개별환급 대상 외 납세자)	3. 31.	3. 19
개별 환급 (3. 11.이후 신청서 제출, 부도·폐업 등의 일부 납세자)	4. 11	3. 29.

- (일괄 환급)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 11.까지 제출한 경우 3. 19.까지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당초: 3. 31.지급),
-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3. 29.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당초: 4. 11.지급)

- ☐ 근로자는 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홈택스(PC)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손택스(모바일)
----------	---

-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은 기업별로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지급 세부일정

2. 28.	3. 11.	3. 19.	3. 22.	3. 29.
기업 → 근로자	기업 → 국세청	국세청 → 기업	근로자 → 국세청	국세청 → 근로자·기업
연말정산 완료	원천세환급신청서·지 급명세서 제출	환급금 지급 (일괄환급)	근로자 직접환급 신청기한	환급금 지급 (개별환급)

\*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 최소 3일 전까지 환급계좌 신고 필요 (미신고 시 환급통지서 발송)

## 2.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 ①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기업에 해당하여 기업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② 해당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③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④ 해당 기업 확인 방법
  -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 ②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③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 3. 22.까지 홈택스\*에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금 지급 적정 여부를 검



토하여 3.29.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서면 제출도 가능하나 지급 일정을 고려하여 홈택스 제출 권장

####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인기검색어 8. 기준시가 ▼ 부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홈택스 첫 화면 검색창에서 '부도' 검색 시 손쉽게 메뉴 이동 가능

### 3.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수입납세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미체결한 은행\* 계좌로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탁계좌, 일부 저축은행 계좌 등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

조회 경로	홈택스(PC)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	---

- 신고한 환급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환급계좌로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환급계좌 적용 순서 |

- 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환급계좌
- ② 개별 세목(근로·기타·사업소득 등)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③ 모든 세목에 대해 환급계좌개설 신고한 계좌

#### 4. 그 외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여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 가능

경로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일(목)	2월 2일(금)	2월 5일(월)	2월 6일(화)	2월 7일(수)
미 달 러 (USD)	1333.50	1332.50	1325.10	1334.60	1329.60
위 안 화 (CNH)	185.63	185.21	184.48	185.18	184.51
일 본 엔 (JPY)	908.19	910.24	892.23	897.75	899.65
유 로 화 (EUR)	1442.11	1449.23	1427.53	1433.76	1430.12
영 국 파 운 드 (GBP)	1691.61	1698.60	1671.61	1672.99	1675.76
캐 나 다 달 러 (CAD)	992.67	995.74	983.63	985.64	985.84
홍 콩 달 러 (HKD)	170.58	170.39	169.43	170.62	169.97

통 화 명	2월 8일(목)	2월 13일(월)	2월 14일(수)	2월 15일(목)	2월 16일(금)
미 달 러 (USD)	1325.30	1327.20	1328.40	1336.90	1333.20
위 안 화 (CNH)	184.13	184.20	183.93	185.09	184.49
일 본 엔 (JPY)	895.20	888.80	882.04	888.48	889.48
유 로 화 (EUR)	1427.94	1429.66	1422.78	1434.49	1436.59
영 국 파 운 드 (GBP)	1673.59	1675.92	1672.72	1680.02	1680.50
캐 나 다 달 러 (CAD)	984.47	986.62	979.10	987.33	990.31
홍 콩 달 러 (HKD)	169.50	169.77	169.88	170.99	170.49

통 화 명	2월 19일(월)	2월 20일(화)	2월 21일(수)	2월 22일(목)	2월 23일(금)
미 달 러 (USD)	1333.00	1333.80	1337.90	1335.00	1331.00
위 안 화 (CNH)	184.64	185.07	185.63	185.65	184.99
일 본 엔 (JPY)	888.05	888.37	892.20	888.08	884.53
유 로 화 (EUR)	1436.71	1437.57	1446.00	1444.80	1440.74
영 국 파 운 드 (GBP)	1679.91	1679.59	1688.70	1687.31	1685.31
캐 나 다 달 러 (CAD)	988.47	988.40	989.24	988.93	987.35
홍 콩 달 러 (HKD)	170.43	170.54	171.07	170.70	170.15

통 화 명	2월 26일(월)	2월 27일(화)	2월 28일(수)	2월 29일(목)
미 달 러 (USD)	1329.30	1331.40	1331.30	1334.00
위 안 화 (CNH)	184.52	184.76	184.67	184.86
일 본 엔 (JPY)	883.11	883.57	884.73	885.76
유 로 화 (EUR)	1438.57	1444.70	1443.73	1445.92
영 국 파 운 드 (GBP)	1684.89	1688.75	1688.75	1688.98
캐 나 다 달 러 (CAD)	984.27	985.60	984.07	982.58
홍 콩 달 러 (HKD)	169.90	170.17	170.15	170.42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